

# 2025년도 하반기 해양경찰청 채용시험 문제지

## < 정위 공채(일반) 2교시 >

- [필수 1] 해양경찰학개론(01)
- [선택 2] 헌법(05), 범죄학(06), 행정법(07), 행정학(08)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응시자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본인의 <u>응시분야</u>, <u>계급</u>, <u>과목</u>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바랍니다.</li><li>○ 시험이 시작되면 신속히 페이지를 넘겨 인쇄 상태 등 파본여부를 확인바랍니다.</li><li>○ 문제지에 이상이 있는 경우 교체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li><li>○ 이를 확인하지 않거나 교체를 요구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li></ul>

성 명 :	응 시 번 호 :
-------	-----------

해양경찰청

## 해양경찰학개론

1. 다음 중 해양경찰 개념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예방해양경찰은 사전에 경찰상의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작용이며, 진압해양경찰은 이미 발생한 경찰상의 위해를 제거하기 위한 권력작용을 의미한다.
- ② 행정해양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작용을 의미하며, 사법해양경찰은 해양 등에서 범죄를 일으킨 범죄자를 체포해서 처벌하는 작용으로서 실질적 의미의 해양경찰을 의미한다.
- ③ 질서해양경찰은 보통해양경찰조직의 직무범위 중에서 강제력을 수단으로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법집행을 하는 작용을 의미하며, 봉사해양경찰은 강제력이 아닌 서비스, 계몽, 지도 등을 통해 해양경찰직무를 수행하는 활동이다.
- ④ 평시해양경찰은 일반해양경찰기관이 일반해양경찰법규에 의하여 평시에 해양경찰작용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비상해양경찰은 전시, 계엄이 선포되어 통합방위사태 등 비상시에 군대가 행하는 해양경찰작용을 의미한다.

2. 해양경찰 통제는 필요성과 기본요소로 구분된다. 다음 중 해양경찰 통제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민주적 운영 : 해양경찰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민주적으로 조직되고 운영·관리되어야 한다.
- ② 정치적 중립성 확보 : 해양경찰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특정정당이나 특정집단의 이익이나 이념을 위해 활동해서는 안된다.
- ③ 법치주의 확립 : 해양경찰활동의 신뢰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어진 법률의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④ 절차적 참여 : 해양경찰은 국민의 행정참여를 보장하고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3. 다음 중 「해양경찰법」상 해양경찰청 수사부서의 장을 외부에서 임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10년 이상 일반수사업무에 종사한 사람 중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 ②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
- ③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④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경찰학·해양경찰학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

4. 다음 중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상 함·정장의 보직기준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1000톤급 이상 자격조건 : 3급 이상 해기사 (항해사, 항해전문 운항사) 면허를 보유한 사람
- ② 1000톤급 미만 자격요건 : 4급 이상 해기사 (항해사, 항해전문 운항사) 면허를 보유한 사람
- ③ 1000톤급 이상 경력조건 : 대형함 부장, 중형함 함장 또는 소형정 정장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④ 1000톤급 미만 250톤 이상 경력조건 : 대형·중형·소형함 부장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다음 <보기> 중 해양경찰청이 독립 외청으로 존재하는 시기에 시행된 주요 정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보 기 > —

- ㉠ 수난구호법 제정
- ㉡ 해양오염방제업무 신설
- ㉢ 해양경찰청장의 직급이 차관급으로 승격
- ㉣ 서해5도 특별경비단 신설
- ㉤ 해양경찰법 제정
- ㉥ 해양경찰청 수사국 신설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6. 다음 <보기>는 해양경찰청 A총경의 재산 현황이다.  
A총경이 공직자로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등록  
해야 하는 재산의 총액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이외의 친족 및 재산은 없음, 가족 및 친족 중에  
고지거부 대상자 없음)

< 보기 >

- ㉠ A총경 본인이 소유한 일본에 있는 아파트 전세권 : 1,000만원
- ㉡ A총경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소유한 양식업권 : 2,000만원
- ㉢ A총경의 미성년아들이 소유한 예금 : 800만원
- ㉣ A총경의 모친이 소유한 금목걸이 : 600만원
- ㉤ A총경의 혼인한 딸이 소유한 골프회원권 1개 : 1,000만원
- ㉥ A총경의 외조부가 소유한 국채 : 1,000만원

- ① 2,400만원                      ② 3,600만원  
③ 4,400만원                      ④ 6,400만원

7. 다음 <보기> 중 중국 해경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 기 >

- ㉠ 2013년 중국 국무원(國務院)은 국가해양국(國家海洋局)과 해감총대(海警總隊), 공안부(公安部) 변방해경부대(邊防海警部隊), 농업부(農業部) 중국어정(中國語政), 해관총서(海關總署) 소속 밀수단속경찰(緝私巡邏警察) 등을 통합하여 국가해양국으로 재편성하였다.
- ㉡ 2018년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중국 해경을 무장경찰대로 편입시켰다. 이에 따라 국가해양국이 지도·관리하는 해경부대 및 관련 직무기능은 모두 공안부의 무장경찰부대로 편입되었다.
- ㉢ 2021년 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 해경법은 중국의 해양권익수호와 함께 해양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해경의 역할강화와 기능분산에 따른 비효율성 개선 및 통합적 업무수행의 필요성에 의해 제정되었다.
- ㉣ 중국 해경국의 지방조직으로는 북해·동해·남해의 3개 지역분국이 있으며, 그 산하에 총 9개의 총대로 구성되어 있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8. 다음 중 「함정운영관리규칙」상 정박당직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3,000톤급 이상의 정박당직 근무인원은 3-4명이며, 당직함정인 경우 4명이 근무를 하여야 한다.
- ② 정박당직근무자는 방법, 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 문서의 수발·인계 또는 관리, 종합상황실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비상근무 발령시 소속 승조원 비상소집 등을 조치한다.
- ③ 당직근무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근무시간을 분할한다. 다만, 평일 휴무일 당직근무자가 정박 중 근무를 병행하는 경우에는 일근 시간을 분할해야 한다.
- ④ 정박 당직근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신규 채용자 및 전입자는 7일간, 장애·임신·장기와병자는 4주 이상, 출산자의 경우 1년 미만에 한정하여 정박당직근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

9. 다음 중 해양경찰의 위협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위험이란 가까운 장래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손해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해양경찰상 위험이란 개인 및 공동의 법익에 대한 침해의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 ② 구체적 위험은 개개 사안에 있어서 가까운 미래에 손해발생 가능성이 충분한 경우를 의미하며, 추상적 위험은 구체적 위험의 예견 가능성을 의미한다. 해양경찰의 개입은 구체적 위험 뿐만 아니라 추상적 위험이 있을 때에도 가능하다.
- ③ 외관적 위험이란 해양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상황판단을 하여 개입하였으나, 실제로는 위험이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해양경찰의 위험방지는 위험의 존재 여부가 명확해질 때까지 예비적 조치에만 국한되어야 한다.
- ④ 오상위험이란 위험의 외관이나 혐의가 정당화되지 아니함에도 위험의 존재를 잘못 추정한 것이다. 오상위험 상황에서 해양경찰공무원의 개입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이나 형사책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10. 다음 <보기> 중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경찰착용 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상 해양경찰착용 기록장치의 사용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보 기 >

㉠

해양경찰관은 해상검문검색 또는 추적·나포 하는 경우, 수난구호 임무 시 수색 또는 구조를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

해양경찰관은 해상항행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는 현장 및 불법어획물 방류명령이 이뤄지는 현장에서 범죄수사를 위해 긴급히 증거를 수집하거나 현장 기록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사용하여 기록하는 경우,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때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

㉣

경찰착용기록장치에 기록된 영상음성기록의 보관기간은 해당 기록을 영상음성기록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전송·저장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다만, 해당 영상음성기록이 수사 중인 범죄와 관련된 경우 등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90일로 한다.

㉤

‘㉣’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 해양경찰서장은 범죄수사를 위한 증거 보전이 필요한 경우 등 영상음성기록을 계속하여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90일의 범위에서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1. 다음 <보기>는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상 기본강령의 일부 내용이다. ( ) 안에 들어갈 용어를 가장 옳게 나열한 것은?

- < 보 기 >

○ 경찰사명

： 경찰공무원은 ( ㉠ )을 위하여 충성과 봉사를 다하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 경찰정신

：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 ㉡ )로서 일상의 직무수행에 있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호국·봉사·정의의 정신을 그 바탕으로 삼는다.

○ 책임

： 경찰공무원은 ( ㉢ )으로써 소임을 완수하여야 하며, 직무수행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	㉢
①	국가와 민족	수임자	창의와 노력
②	국가와 국민	봉사자	성실과 청렴
③	국가와 민족	대행자	겸손과 감동
④	국민과 국민	책임자	존중과 협력

12. 다음 중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상 해양테러사건대책본부장인 해양경찰청장이 현장지휘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해양경찰청장은 테러사건이 발생할 경우 사건 현장의 대응 활동을 총괄하기 위하여 현장지휘 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현장지휘본부장은 해양경찰청 경비국장이 담당한다.
- ③

현장지휘본부장은 테러의 양상·규모·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협상·진압·구조·구급·소방 등에 필요한 전문조직을 직접 구성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현장지휘본부장은 현장에 출동한 관계기관의 조직(대테러특공대, 테러대응구조대,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 및 대테러합동조사팀을 포함)을 지휘·통제한다.

13. 다음 중 「출입국관리법」상 긴급출국금지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사기관은 범죄피해자로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수사기관은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한 때로부터 6시간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의 검토의견서 및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출국금지의 사유 등을 기재한 긴급출국금지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법무부장관은 수사기관이 긴급출국금지 승인 요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국금지를 해제해야 한다. 수사기관이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요청한 때로부터 12시간 이내에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같다.
- ④ 법무부장관에게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을 못하거나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되어 출국금지가 해제된 경우에 수사기관은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긴급출국금지 요청을 할 수 있다.

14. 다음 중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상 대한민국의 영해를 통과하던 외국선박 내에서 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대한민국의 형사재판관할권이 미치는 경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해당 범죄가 대한민국 영해의 공공질서를 교란하는 종류일 때
- ②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를 진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 ③ 그 선박의 선원이 대한민국에 지원을 요청한 때
- ④ 해당 범죄의 결과가 대한민국에 영향을 미칠 때

15. 다음 <보기>의 (    ) 안에 들어갈 용어로 가장 옳은 것은?

— < 보 기 > —

해양경찰에서는 (    ) 개념을 2020년부터 정책에 반영해 도입하고 있다. 이는 주변국과의 해양 분쟁, 불법 외국 어선, 밀입국 등 바다에서 발생하거나 바다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각종 안보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해양재난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여 국민 안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함이다. 특히, (    ) 플랫폼 구축이 완료되면 연안 해역 뿐만 아니라 광역 해양에 대한 24시간 빈틈없는 상황감시 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해양재난 상황 정보와 함께, 국가 안보 측면의 다양한 위협 요인까지 조기에 감지해 국민에게 알리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가능해 질 것이다.

- ① 해양상황인식체계
- ② 해양첨단기술 고도화 사업
- ③ 현장업무포털시스템
- ④ 해양경찰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

16. 다음 중 해양경찰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해양경찰행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실에 해양경찰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이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면직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 ③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④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17. 다음 중 「해양경찰청 비상소집 및 근무 규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비상상황’이란 해양주권·안보·안전·치안·오염과 관련하여 중요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다수의 경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는 때를 말한다.
- ② ‘해상경계강화’란 관내 취약요소에 대한 순찰과 감시를 강화하고 유관기관 간 정보교환을 철저히 하는 등 즉응태세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 ③ ‘지휘통제선상 위치’란 지휘관이 유사시 통신으로 즉시 상황지휘가 가능하고 1시간내 상황지휘 및 상황근무가 가능한 위치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 ④ ‘비상대기 태세 유지’란 모든 공무원이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면서 비상소집이 가능한 위치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18. 다음 중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상 해양경찰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도서, 농·어촌 벽지 등 교통·지리적 원격지로 인접 해양경찰관서에서의 출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
- ② 관할구역에 국가중요시설 등 특별한 경계가 요구되는 경우
- ③ 휴전선 인근 등 보안상 취약지역을 관할하는 경우
- ④ 위 사항 외에 치안수요가 특수하여 파출소 운영과 함께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

19. 다음 중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도입’이란 해양경찰 장비를 구매하거나 건조·제작하여 해양경찰청장에 인계하는 것을 말한다.
- ② 해양경찰장비 도입의 기본원칙 중 하나는 검증된 기술을 활용한 최신 장비를 도입하는 것이다.
- ③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는 해양경찰장비의 실용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④ 해양경찰장비의 내용연수는 「물품관리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20. 다음 중 「해상수색 및 구조에 관한 국제협약」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 세계의 수색 및 구조기구 간의 협력과 해상에서의 수색 및 구조 활동의 참가 당사자 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 ②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 9월 4일 가입서를 기탁, 1995년 10월 4일 발효되었다.
- ③ 이 협약과 관련한 국내법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다.
- ④ 1979년 4월 27일 IMO에서 채택, 1985년 6월 22일 발효되었다.

21. 다음 <보기> 중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상 내용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보 기 > —
- ㉠ 순찰구조팀장은 파출소장 부재 시 업무대행 임무를 수행한다.
  - ㉡ 탄력근무형 출장소는 관할 파출소의 소속 경찰관이 출장소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근무한 후에 퇴근하는 방법으로 운영한다.
  - ㉢ 출장소장은 무기·탄약 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 ㉣ 대기근무를 지정받은 경찰관은 파출소에서 대기하되, 통신기기를 청취하며 즉시 출동이 가능한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 ㉤ 2교대 근무 시 근무 24시간당 휴게 4시간을 줄 수 있으며, 야간 4시간 이내 사용 가능하다.
  - ㉥ 현장업무포털시스템 이용이 불가한 경우 별도 서식에 따라 기록한 근무일지의 보존기간은 2년이다.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22. 다음 <보기> 중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에 규정된 공조의 범위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보 기 > —
- ㉠ 사람의 소재에 대한 수사
  - ㉡ 서류·기록의 제공
  - ㉢ 시설·장비의 지원
  - ㉣ 압수·수색
  - ㉤ 증거물의 인도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23. 다음 중 「해양환경관리법」상 용어 정의가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름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원유 및 석유제품(석유가스는 제외)과 이들을 함유하고 있는 액체상태의 유성혼합물 및 폐유
  - ② 포장유해물질 : 포장된 형태로 선박에 의하여 운송되는 유해물질 중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
  - ③ 유해액체물질 :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액체물질(기름은 제외)과 그 물질이 함유된 혼합 액체물질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
  - ④ 유해방오도로 : 해양에 유입되어 생물체에 농축되는 경우 장기간 지속적으로 급성·만성의 독성 또는 발암성을 야기하는 화학물질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

24. 다음 중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규칙」에 따른 상황접수 부서를 나타낸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위성조난 신호 (EPIRB)	V-PASS SOS	긴급신고 전화	VHF-DSC 등 무선조난 통신
①	해양경찰청 상황실	해양경찰서 상황실	지방해양 경찰청 상황실	해양경찰청 국제안전 통신센터
②	해양경찰청 국제안전 통신센터	해양경찰서 상황실	지방해양 경찰청 상황실	해양경찰청 상황실
③	해양경찰청 상황실	해양경찰서 상황실	지방해양 경찰청 상황실	지방해양 경찰청 상황실
④	지방해양 경찰청 상황실	지방해양 경찰청 상황실	해양경찰서 상황실	해양경찰서 상황실

25. 다음 <보기> 중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상 내용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보 기 >

- ㉠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에서 조난된 선박등을 구난하려는 자는 구난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구조본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 구조본부의 장은 구난작업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난작업 관계자에게 인력의 보강을 위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 구조본부의 장은 구난작업의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구난작업을 실시하는데 신고된 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보완한 후 다시 신고하게 하여야 한다.
  - ㉣ 국가는 수난구호 종사명령에 따라 수난구호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를 실시할 수 있다.
  - ㉤ 국가는 수난구호 종사명령에 따라 수난구호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에 의한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① 2개
  - ② 3개
  - ③ 4개
  - ④ 5개

26. 다음 중 해상 음주운항 단속 업무의 근거 법률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선박안전법」
  - ② 「납시 관리 및 육성법」
  - ③ 「수상레저안전법」
  - ④ 「해상교통안전법」

27. 다음 중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상 규정된 내용이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의 보안 기준 내용과 다를 경우, 적용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국제협약의 보안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 ②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 ③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의 규정 내용을 우선 적용하되, 국제협약의 보안 기준이 해당 법률의 보안기준 보다 강화된 기준을 포함하는 때에는 국제협약을 적용한다.
- ④ 국제협약의 보안기준을 우선 적용하되,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의 규정 내용이 국제협약의 보안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포함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을 적용한다.

28. 다음 <보기> 중 「해양경비법」상 명시적으로 규정된 해양경찰의 해양경비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보 기 >
- ㉠ 해양 관련 범죄에 대한 예방
  - ㉡ 해양 범죄에 대한 정보 수집
  - ㉢ 해양오염 방제에 관한 조치
  - ㉣ 대테러 및 대간첩작전 수행
  - ㉤ 해양 사고에 대한 초동 조치
  - ㉥ 해양시설의 보호에 관한 조치
  - ㉦ 해상항행 보호에 관한 조치

-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29. 다음 <보기> 중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상 내용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보 기 >
- ㉠ 해양경찰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지방해양경찰청을 둔다.
  - ㉡ 해양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 종합상황실장은 해양상황의 접수·처리·전파 및 보고 등 초동조치 등과 같은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 ㉣ 차장 밑에 대변인, 기획조정관, 감사담당관을 둔다.
  - ㉤ 구조안전국장은 해양에서의 항공기 사고조사 및 원인분석에 대한 사항을 분장한다.
  -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는 안전총괄부장이 없다.
  - ㉦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위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30. 다음 <보기> 중 경찰상 의무이행 확보수단에서 간접적인 의무이행 확보수단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보 기 >
- |            |            |
|------------|------------|
| ㉠ 경찰벌      | ㉡ 경찰상 즉시강제 |
| ㉢ 집행벌      | ㉣ 공급거부     |
| ㉤ 강제징수     | ㉥ 명단공개     |
| ㉦ 관허사업의 제한 | ㉧ 대집행      |

- ① 4개    ② 5개    ③ 6개    ④ 7개

31. 다음 중 SRI(특별정보요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임시적, 돌발적이며 지역적인 특수사항에 대한 단기적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요구이다.
- ② 정보수집지침은 사안과 대상에 따라 상이하며 비교적 구체성과 전문성이 요구된다.
- ③ 정보기관의 활동은 주로 SRI(특별정보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 ④ 사전에 정보수집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2. 다음 중 해양경찰 수사활동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해양경찰의 수사활동은 주로 해양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로 활동 대상 장소가 광활하다.
- ② 바다라는 넓은 공간에서 실행한 범죄는 육상에서 발생한 범죄와 비교하였을 때 증거가 인멸되기 쉽다.
- ③ 주로 선박을 기반으로 범죄가 이루어지는 관계로 육상에서 발생한 범죄와 비교하였을 때 목격자 확보가 쉽다.
- ④ 주로 선박에 의한 접근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범죄장소 등 원하는 지점까지의 접근이 쉽지 않다.

33. 다음 중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해양재난구조대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는 해양경찰서별로 1개로 한다. 다만, 인구·면적·행정구역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해양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별로 2개 이상의 해양재난구조대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해양재난구조대의 날 기념행사는 매년 12월 23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일에 개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념행사 개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③ 해양재난구조대원으로 위촉받으려는 사람은 지원신청서에 사진 2장을 첨부하여 관할 해양재난구조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해양재난구조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 ④ 해양경찰서장은 해양재난구조대장과 부대장을 해양경찰청장에게 추천할 때에는 해양재난구조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부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34. 다음 <보기> 중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상 해양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보 기 > —
- ㉠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매년 근무성적을 평정해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승진 및 인사관리에 반영해야 한다.
  - ㉡ 근무성적은 제1평정요소와 제2평정요소로 구분하고, 전자는 해양경찰업무 발전에 대한 기여도, 포상실적,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평정요소로 하며, 후자는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로 평가한다.
  - ㉢ 제2평정요소에 따른 근무평정 성적은 평정 대상자의 계급별로 ‘수’는 20%, ‘우’는 40%, ‘양’은 30%, ‘가’는 10%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해야 한다. 다만, ‘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양’의 비율에 가산하여 적용한다.
  - ㉣ 근무성적 평정결과는 공개한다. 해양경찰청장은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되면 평정 대상 경찰공무원에게 해당 근무성적 평정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5. 다음 중 「형사소송법」 및 「해양경찰수사규칙」상 변사자 검사와 관련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법경찰관리는 검시에 착수하기 전에 변사자의 위치, 상태 등이 변하지 않도록 현장을 보존하고 변사자 발견 당시 변사자의 주변 환경을 조사해야 한다.
- ②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 있는 사체가 있을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에게 그 처분을 명할 수 있다.
- ③ 사법경찰관리는 검시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변사자의 가족·친족, 이웃사람·친구, 시·군·구·읍·면·동의 공무원이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검시에 참여시켜야 한다.
- ④ 사법경찰관리는 자살자나 자살로 의심되는 사체를 검시하는 경우에는 교사자 또는 방조자의 유무와 유서가 있는 경우 그 진위를 조사해야 한다.

36. 다음 중 해양경찰조직의 편성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계층제의 원리는 지휘·명령의 통로와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설정하며, 조직의 통일성을 유지시키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에, 동태적 인간관계의 저해, 조직의 경직화, 새로운 지식·기술 도입의 신속성을 저해시킨다.
- ② 명령통일의 원리가 강조되다 보면, 조직구성원들은 참모조직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지며, 이는 전문화의 원리에 위배된다. 모든 지시 또는 제안이 반드시 공식적 명령계통을 통해서만 수행된다면 공식적 의사소통경로에 과중한 부담을 지게 되며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
- ③ 분업의 원리는 조직의 기능을 성질별로 나누어 가급적 한 사람에게 동일한 업무를 분담하는 것이다. 부작용으로는 전문가적 편협성과 할거주의로 인해 조직 내의 각 단위의 조정을 저해하고 기능중복 현상에 의한 비능률을 초래할 수 있다.
- ④ 통솔범위의 원리는 한 사람의 상관이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는 부하의 수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미이다. 조직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통솔범위를 확대하느냐 또는 축소하느냐를 결정하는 다양한 요인 중 비례관계에 있는 것은 업무의 복잡성, 조직의 크기 등이 있다.

37. 다음 <보기>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대책협의회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보 기 > —

- ㉠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마약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마약류대책 협의회를 둔다.
- ㉡ 마약류대책협의회는 마약류 관련 국내외 정보의 공유 및 관리, 국제협력·수사·단속·치료·재활·교육·홍보 등을 위한 관계 기관 및 단체의 협조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조정한다.
- ㉢ 마약류대책협의회 의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담당한다.
- ㉣ 마약류대책협의회 의원은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해양경찰청장이 위원이 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8. 다음 중 훈령의 실질적 요건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내용이 실현 가능하고 명확할 것
- ② 훈령권 있는 상급관청이 발한 것일 것
- ③ 하급관청의 권한 내의 사항에 관한 것일 것
- ④ 직무상 독립한 범위에 속하는 사항이 아닐 것

39. 다음 <보기> 중 공무원의 징계와 관련하여 ( )안에 들어갈 모든 숫자의 합으로 옳은 것은?

— < 보 기 > —

- 정직은 ( ㉠ )개월 이상 ( ㉡ )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 강등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되,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 ㉢ )개월 간 직무를 정지하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직무정지 종료일로부터 ( ㉣ )개월간 승급을 제한한다.
- 해임은 경찰공무원 관계가 소멸되고 향후 ( ㉤ )년간 일반공무원 임용이 금지된다.
-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이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 ㉥ )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① 32    ② 34    ③ 38    ④ 40

40. 다음 중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포함)」상 출국제한 사유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정지할 수 있다.
- ②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1항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외국인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 ③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외국인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정지할 수 있다.
- ④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외국인이나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가 된 외국인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헌법

1. 다음 헌법해석과 합헌적 법률해석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의 해석은 헌법이 담고 추구하는 이상과 이념에 따른 역사적·사회적 요구를 올바르게 수용하여 헌법적 방향을 제시하는 헌법의 창조적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적 욕구와 의식에 알맞는 실질적 국민주권의 실현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② 현행 헌법이 제헌 헌법 이래 사용해 온 “구금”이라는 용어를 “구속”으로 바꾼 것은 헌법 제12조에 규정된 신체의 자유의 보장 범위를 구금된 사람뿐 아니라 구인된 사람에게까지 넓히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③ 어떤 법률의 개념이 다의적이고 그 어의의 테두리 안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때에는 헌법을 최고 법규로 하는 통일적인 법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을 택해야 한다.

④ 합헌적 법률해석의 취지에 따라 헌법정신에 맞도록 법률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정정하는 것이 허용되므로, 입법의 공백을 방지하고 형평성의 왜곡을 시정하기 위하여 실효된 법률조항을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도 정당화될 수 있다.
2. 다음 <보기> 중 헌법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보 기 >

㉠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30일 이상의 기간 공고하여야 한다.

㉡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헌법개정에 관한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 헌법의 개정은 ‘형식적 의미’의 헌법인 성문 헌법과 관련된 개념이므로 관습헌법의 변경은 법률의 형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 다음 우리 헌법의 역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는 1960년 제3차 개정 헌법에 처음 규정되었고 1972년 제7차 개정헌법에서는 삭제되었다가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에 다시 규정되었다.

②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1962년 제5차 개정 헌법에 처음 규정되었다.

③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환경권,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은 1980년 제8차 개정 헌법에 처음 규정되었다.

④ 제헌 헌법은 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자가 무죄판결을 받은 때 형사보상청구권을 인정하였고, 1987년 제9차 개정헌법은 피의자로서 형사보상청구권 인정 범위를 확대하였다.

4. 다음 국적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된 미성년자는 출생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었더라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복수국적자에 대해서는 그가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함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국적의 상실을 결정할 수 없다.

③ 국적이탈 신고서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한 「국적법 시행규칙」 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④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법무부장관에게 외국 국적 취득을 신고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5. 다음 헌법전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현행 헌법전문은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9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② 일제강점기에 일본군위안부로 강제 동원되어 비극적인 삶을 영위하였던 피해자들의 훼손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시켜야 하는 것은 헌법전문에 의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지금 정부가 국민에게 부담하는 근본적인 보호의무에 속한다.
- ③ 헌법전문에 기재된 ‘3·1 정신’은 우리나라 헌법의 연혁적·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의 해석 기준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로부터 곧바로 개별적 기본권성을 도출해낼 수는 없다.
- ④ 헌법전문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선언하고 있으므로, 국가는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를 하여야 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6. 다음 헌법상 국제질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 ②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존재한다거나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 ③ 헌법에 따라 적법하게 체결되어 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지만,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조약으로는 새로운 범죄를 구성하거나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가중할 수 없다.
- ④ 자유권규약의 당사국인 우리나라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를 존중하여야 하므로, 입법자는 자유권규약위원회 견해에 구속되어 그 모든 내용을 그대로 따라야만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7. 다음 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비사업용 토지는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보유하는 것이므로,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 제122조에 근거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가중하는 것은 허용된다.
- ② 우리 헌법상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이에 수반되는 갖가지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복지·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 ③ 농지의 소작제도는 절대적으로 금지되므로,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는 허용되지만 농지의 위탁경영은 법률로서도 허용할 수 없다.
- ④ 택시운송사업자가 운송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조항은 사기업(私企業) 본연의 목적을 포기할 것을 강요하거나 그 경영과 관련하여 국가의 광범위한 감독과 통제 또는 관리를 받게 하는 것은 아니므로, 헌법 제126조 국가의 경영간섭 금지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

8. 다음 <보기> 중 선거제도와 선거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보 기 >
- ㉠ 시·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헌법이 허용하는 인구편차의 한계는 인구편차 상하 33⅓ %, 인구비례 2:1이다.

㉡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중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에 관한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헌법 제118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임 방법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 아니고 법률상 인정되는 권리에 불과하다.

㉣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① ㉠, ㉡      ② ㉡, ㉢      ③ ㉡, ㉣      ④ ㉢, ㉣

9. 다음 정당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정당조항이 헌법에 처음 규정된 것은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이고,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은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조항을 신설하였다.

② 정당이 최근 4년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나 시·도의회의원 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③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5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한 「정당법」 조항은 지역 현안에 관한 정치적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지역정당의 출현을 방해하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정당의 자유를 침해한다.

④ 정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당헌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외에 그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0. 다음 법률유보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국민의 기본권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

② 법률유보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만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권의 제한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할 뿐이고 기본권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일 필요는 없다.

③ 규율대상이 기본권적 중요성을 가질수록, 그에 관한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 내지 상충하는 이익 간 조정의 필요성이 클수록, 그것이 국회의 법률에 의하여 직접 규율될 필요성과 그 규율밀도의 요구 정도는 그만큼 더 증대된다.

④ 수신료 징수업무를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할 때 그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방송법 시행령」 조항은 그 성질이 집행명령에 해당하지만 법률의 위임 없이 제정된 것이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

11. 다음 <보기> 중 명확성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보 기 >
- ㉠ 허위재무제표작성죄와 허위감사보고서작성죄에 대하여 배수벌금을 규정하면서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대한 벌금 상한액을 정하지 않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중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관한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 ㉡ 업무방해죄를 규정한 「형법」 제314조 제1항 중 ‘제313조의 방법 중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 관한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에 관한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 ㉣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을 처벌하는 「군형법」 제64조 제2항 중 ‘상관’에 관한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	㉢	㉣
①	X	O	O	X
②	X	O	X	O
③	O	X	O	X
④	O	X	X	O

12. 다음 소급입법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조세에 관한 법규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으므로, 납세의무자로서는 구법 질서에 기초한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든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현재의 조세법이 변함없이 유지되리라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 없다.
- ② 1억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노역장유치기간의 하한을 새롭게 정한 「형법」 제70조 제2항을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소제기되는 사건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배된다.
- ③ 친일재산을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국가의 소유로 하도록 규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조항은 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하지만 헌법 제13조 제2항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④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조항을 시행일 이후 갱신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소급입법금지원칙에는 위배되지 않지만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13. 다음 기본권 주체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학교안전공제회는 공법인 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이므로 기본권의 수범자일 뿐 기본권의 주체는 될 수 없다.
- ② 국가자격제도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을 가질 수 없게 된 외국인은 국민의 권리인 직업선택의 자유의 주체는 될 수 없지만 인간의 권리인 평등권의 주체는 될 수 있다.
- ③ 정보공개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학교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기본권의 수범자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 ④ 불법체류라는 것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체류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의 경우에는 침해를 주장하는 기본권이 인간의 권리인가 여부와 상관없이 그 주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14. 다음 헌법 제10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가치있는 행동만 보호하므로, 위험한 스포츠를 즐길 권리와 같은 위험한 생활 방식으로 살아갈 권리는 그 보호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부정하게 취득하지 않은 운전면허까지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소지자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다.

③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를 강제하는 것은 가해학생의 인격과 양심의 형성에 왜곡을 초래하므로 가해학생의 인격권을 침해한다.

④ 경찰이 기자들의 취재요청에 응하여 경찰서 조사실에서 얼굴과 수갑이 드러난 채로 조사받는 보험사기 피의자의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행위는 범죄정보를 실감나게 제공하려는 공익적 목적이 크므로 피의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15. 다음 평등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특별교통수단에 있어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을 정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을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과 달리 취급하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

② 내국인 및 영주·결혼이민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과 달리 일반 외국인 지역가입자에 대하여는 납부할 월별 보험료의 하한을 전년도 전체 가입자의 평균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한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조항은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이므로 일반 외국인 지역 가입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③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없도록 한 「행정소송법」 조항은 피고가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인 경우와 달리 국가인 경우에는 가집행선고의 필요성이 현저히 적으므로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에 해당하여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④ 초·중등학교 교원에 대하여는 정당가입을 금지 하면서 대학 교원에게는 정당가입을 허용하는 「정당법」 조항은 직무의 본질이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한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이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16. 다음 영장주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12조 제3항과는 달리 헌법 제16조 후문은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영장주의에 대한 예외를 명문화하고 있지 않으므로, 헌법 제16조의 영장주의에 대해서는 그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

② 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하는 영장은 명령장으로서의 성질을 갖지만 수사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발부하는 구속영장은 허가장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③ 특별검사가 참고인에게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하도록 명령하고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것은 영장주의원칙에 위배된다.

④ 마약류 관련 수형자에 대한 마약류반응검사를 위해 수형자로 하여금 소변을 받아 제출하게 한 것은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영장주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17. 다음 무죄추정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소제기 되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한 것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유죄의 인정에서 비롯되는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②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조항은 유죄를 근거로 사회적 비난 내지 응보적 의미의 제재를 가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③ 무죄추정의 원칙상 금지되는 ‘불이익’은 형사절차 내에서의 불이익에 한정되므로, 일반 법생활 영역에서의 기본권 제한과 같은 경우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요양기관이 사무장병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조항은 사후적인 부당이득 환수절차의 한계를 보완하고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위험을 방지하려는 것이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18. 다음 <보기> 중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 피의자 및 피고인이 가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확보되기 위해서는 피의자 및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의 핵심적인 부분이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 수형자가 형사사건의 변호인이 아닌 민사사건, 행정사건, 헌법소원사건 등에서의 변호사와 접견할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구치소장이 변호인접견실에 CCTV를 설치하여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을 관찰한 행위는 미결수용자로 하여금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함으로써 미결수용자의 변호인과의 자유롭고 충분한 접견을 방해하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을 받고 인천공항 송환 대기실에 수용 중인 외국인은 형사절차에서 구속된 것이 아니고 행정기관에 의해 구금된 것에 불과하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

① ㉠

② ㉠, ㉡

③ ㉠, ㉡, ㉣

④ ㉠, ㉡, ㉢, ㉣

19. 다음 진술거부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성매매를 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성매매 피해자와 구별하여 자발적인 성매매자만 처벌함으로써 성판매자로 하여금 성매매피해자로 구제받기 위해 성매매 사실을 스스로 진술하게 하므로 진술거부권을 침해한다.
  - ②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명세서·영수증·회계장부를 보존하지 않은 정당의 회계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조항은 회계장부 등을 보존하는 행위를 ‘진술’로 볼 수 없으므로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③ 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행정절차나 국회에서의 조사절차 등에서도 보장되고 현재 피의자나 피고인으로서 수사 또는 공판절차에 계속 중인 사람뿐만 아니라 장차 피의자나 피고인이 될 사람에게도 보장된다.
  - ④ 재산명시의무를 위반한 채무자에 대하여 법원이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민사집행법」 조항은 형사상 불이익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0. 다음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예비군대원 본인의 부재시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한 같은 세대 내의 성년 가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통지서를 예비군대원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하는 「예비군법」 조항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
  - ② 음주운항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항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해사안전법」 조항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
  - ③ 주거침입강제추행죄와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
  - ④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미수범이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

21. 다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금융감독원 4급 이상 직원에 대하여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하는 「공직자윤리법」 조항은 재산등록의무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② 인터넷언론사의 공개된 게시판·대화방에서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단순한 의견 등의 표현행위에 불과하여 사생활 비밀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없다.
  - ③ 보호자 전원이 반대하지 않는 한 어린이집에 의무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조항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 ④ 운전할 때 운전자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는 문제는 더 이상 사생활영역의 문제가 아니어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범주를 벗어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22. 정신과 개원의(開院醫) 甲과 환자 乙은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비급여 진료내역 등 진료비용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한 「의료법」 조항(이하 ‘보고의무조항’이라 함)이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음 <보기> 중 이 헌법소원심판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보 기 >
- ㉠ 보고의무조항으로 인해 진료내역 등 환자의 민감한 의료정보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공되므로 보고의무조항은 乙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 진료과정에서 취득한 환자의 진료내역 등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의사의 직업행사 방법에 대한 간섭이므로 보고의무조항은 甲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

㉢ 의사가 환자의 진료정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는 것은 의사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된 진지한 윤리적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고의무조항이 甲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 보고의무조항은 보고대상인 비급여 진료내역 등과 관련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은 채 사실상 모든 국민의 비급여 진료에 관한 정보 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면서 환자에게 자신의 의료정보 제공을 거부할 권리도 보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3. 다음 거주·이전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복수국적자에 대하여 제1국민역에 편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야 국적이탈이 가능하도록 한 「국적법」 조항은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

② 여행금지국가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예외적 여권사용 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금지국가를 방문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여권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여행금지국가를 방문하려는 자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

③ 일정 금액 이상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의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추징금 미납자의 출국의 자유를 침해한다.

④ 복수국적자의 경우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국적이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국적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

24. 다음 통신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교도소장이 수용자에게 온 서신을 개봉하여 내용물을 확인한 행위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수용자의 교화 및 사회복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수용자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② 패킷감청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인터넷회선 감청을 허용한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은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고 기본권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있으므로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

③ 통신의 자유는 통신내용의 비밀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통신으로 발생하는 외형적인 사실관계, 특히 통신관계자의 인적 동일성·통신시간·통신장소·통신횟수 등 통신의 외형을 구성하는 통신이용의 전반적 상황의 비밀까지 보호한다.

④ 전기통신역무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가입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은 익명으로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여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통신하고자 하는 사람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

25. 다음 양심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는 양심으로 인정할 것인지의 판단은 그것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된 것인지 여부에 따르므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하는 사람은 자신의 양심을 외부로 표명하여 증명할 최소한의 의무를 진다.

② 보안관찰처분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보안관찰 해당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내심의 영역을 벗어나 외부에 표출되는 경우에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내려지는 특별예방적 목적의 처분이므로, 보안관찰처분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보안관찰법」 조항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③ 자신의 태도나 입장을 외부에 설명하거나 해명하는 행위는 진지한 윤리적 결정에 관계된 행위라기보다는 단순한 생각이나 의견, 사상이나 확신 등의 표현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하지 못하게 된다 하더라도 양심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④ 대체복무기관을 교정시설로 한정하고 대체복무 요원으로 하여금 합숙하여 복무하도록 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그 고역(苦役)의 정도를 대체복무와 현역복무의 형평성 확보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과도하게 설정한 것이므로 대체복무요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26. 다음 종교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육군훈련소장이 훈련병으로 하여금 개신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4개 종교의 종교행사 중 하나에 참석하도록 강제한 것은 국가와 종교의 밀접한 결합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양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노인복지법」 조항은 구호활동의 일환으로 양로시설을 운영하는 종교단체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③ 구치소에 종교행사 공간이 1개뿐이고 미결수용자는 공범이나 동일사건 관련자가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참석하게 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구치소장이 미결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종교행사를 4주에 1회 실시하였더라도 미결수용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④ 연 2회 실시하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시행 일시를 모두 토요일 일몰 전으로 정한 「2021년도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를 믿는 응시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27. 다음 학문·예술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학문의 자유를 향유하는 대학 교원은 대학자치의 주체로서 어느 정도 대학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보장되어 있으나, 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 등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대해서까지 대학 구성원들이 대학의 자율성을 근거로 그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국립대학 교원의 성과연봉 지급에 대해 규정한 「공무원보수규정」은 본질적으로 계량적인 측정과 평가가 불가능한 영역인 학문연구 분야에서 업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성과연봉을 차등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국립대학 교원의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

③ 학교 정화구역 내에서의 극장시설 및 영업을 금지한 「학교보건법」 조항은 공연물·영상물이 지니는 예술작품으로서의 성격에 기하여 직업의 자유와 함께 예술의 자유도 제한한다.

④ 의료인이 아닌 자의 문신시술을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의료법」 조항은 자신의 미적 감상 등을 문신시술을 통하여 시각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의료인 아닌 사람의 예술의 자유를 제한한다.

28. 다음 알 권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개별 교원이 어떤 교원단체나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는지에 관한 정보 공개를 제한하는 것이 학부모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②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국회법」 조항은 의사공개원칙에 위배되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

③ 알 권리는 이미 생성되어 존재하는 정보원(情報源)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현존하는 정보원에 대한 접근을 넘어 적극적으로 새로운 정보의 생성을 구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알 권리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④ 공판조서의 기재에 절대적인 증명력을 부여하는 「형사소송법」 조항은 공판조서의 내용에 대한 접근·수집·처리 등에 관한 규정이 아니므로, 그로 인해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를 의미하는 알 권리에 어떠한 제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9. 다음 표현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21조 제4항 전문은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대한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상업광고 규제에 관한 비례의 원칙 심사에 있어서 ‘피해의 최소성’ 원칙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달리 덜 제약적인 수단이 없을 것인지 혹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인지를 심사한다.

③ 공직자의 자질·도덕성·청렴성에 관한 사실은 그 내용이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순수한 사생활의 영역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사실에 대한 문제제기 내지 비판은 허용되어야 한다.

④ 북한과의 접경지역에서 전단을 살포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조항은 표현의 내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을 제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전단을 살포하려는 사람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0. 다음 집회·결사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일반적으로 집회는 일정한 장소를 전제로 하여 특정 목적을 가진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회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그 공동의 목적은 적어도 내적인 유대관계를 넘어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② 법인 등 결사체는 그 조직과 의사형성 그리고 업무수행에 있어서 독자적인 자기결정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사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③ 헌법 제21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결사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결사’ 개념에는 법이 공공목적에 의하여 구성원의 자격을 정하고 있는 특수단체의 조직활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집회장소는 집회의 목적과 효과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된다.



31. 다음 재산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은 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인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이므로, 구체적 권리가 아닌 영리 획득의 단순한 기회나 기업활동의 사실적·법적 여건은 재산권보장의 대상이 아니다.
- ②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가 피해구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를 지급정지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계좌명의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 ③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가입자 등의 가족에게 사망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급하는 「국민연금법」에 의한 사망일시금 지급권은 사회보험의 원리에 따른 급여이므로 헌법상 재산권에 해당한다.
- ④ 재산권 행사의 사회적 의무성을 헌법에서 명문화하고 있는 것은 사유재산제도의 보장이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 생활과의 조화와 균형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보장임을 천명한 것이므로, 헌법 제23조 제2항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의무는 법적 의무가 아닌 윤리적 의무로 보아야 한다.

32. 직업의 자유에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직업행사의 자유가 포함된다. 다음 <보기> 중 직업행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 비영업용 차량을 광고매체로 이용하여 광고를 대행하는 행위의 금지

㉡ 의료기관 내지 의료인이 의료보험 비지정 요양기관 내지 비보험의(非保險醫)로서 진료하는 행위의 금지

㉢ 운전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가 대가를 받고 운전교육을 실시하는 행위의 금지

㉣ 시각장애인이 아닌 자가 안마사업을 영위하는 행위의 금지

- ① ㉠, ㉡      ② ㉠, ㉢      ③ ㉡, ㉣      ④ ㉢, ㉣

33. 다음 국민투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19세 이상의 국민은 국민투표권이 있으나, 투표일 현재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자는 국민투표권이 없다.
- ② 국회의원선거권자인 재외선거인에게 국민투표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원선거권자의 헌법개정안 국민투표 참여를 전제하고 있는 헌법 제130조 제2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늦어도 국민투표일 18일 전까지 국민투표일과 국민투표안을 동시에 공고하고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 ④ 국민투표는 국민주권주의나 민주주의원칙과 같은 일반적인 헌법원칙에 근거하여 인정될 수 없으며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34. 다음 공무원제도 및 공무담임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 제7조가 정하고 있는 직업공무원제도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이 보장되도록 하는 공직구조에 관한 제도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신분보장을 그 중추적 요소로 한다.
- ② 경찰공무원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한 「경찰공무원법」 조항은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모든 범죄를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관련범죄 등 과실범의 경우마저 당연 퇴직의 사유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으므로 침해 최소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 ③ 5급 공개채용 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을 ‘32세까지’로 한 「공무원임용시험령」 조항은 6급 및 7급 공무원 공채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을 35세까지로 규정하면서 그 상급자인 5급 공무원의 채용연령을 32세까지로 제한한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32세를 넘는 사람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 ④ 헌법 제25조가 규정하는 공무담임권은 재임 기간 동안 충실한 공직 수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위한 퇴직급여제도를 마련하는 것까지 그 보호영역으로 한다.

35. 다음 청구권적 기본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는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도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헌법 제28조 형사보상청구권 조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재산권의 침해에 대하여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③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권리행사방해죄는 그 형을 면제하도록 한 「형법」 조항은 형사피해자가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하여줄 것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서 입법재량을 일탈하여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므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

④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국민의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기본권이므로 외국인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 피해구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

36. 다음 청원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을 접수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이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를 하지 아니한다.

③ 국가유공자가 철도청장에게 자신을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하여 줄 것을 청원하는 경우에 취업보호대상자의 기능직공무원 채용의무비율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국가유공자가 채용시험 없이 바로 자신을 임용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신청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국민이 여러 가지 이해관계 또는 국정에 관해서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해당기관에 직접 진술하는 외에 그 본인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제3자를 통해 진술하더라도 이는 청원권으로서 보호된다.

37. 다음 재판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통고처분에 대해 별도로 행정소송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헌법이 보장하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②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한다.

③ 재판청구권에는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되므로,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된다.

④ 형사보상청구에 대한 보상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여 형사보상의 결정을 단심재판으로 규정한 「형사보상법」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38. 다음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회적 기본권은 입법과정이나 정책결정과정에서 사회적 기본권에 규정된 국가목표의 무조건적인 최우선적 배려가 아니라 단지 적절한 고려를 요청하는 것이다.

② 사적자치에 의해 규율되는 사인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나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도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호대상에 포함된다.

③ 경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는 보험사고에 대하여 의료보험급여를 부정하는 것은 우연한 사고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다수의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의료보험의 본질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④ 근로의 권리는 근로자를 개인의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서 개인인 근로자가 근로의 권리의 주체가 되는 것이고 노동조합은 그 주체가 될 수 없다.

39. 다음 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교육을 받을 권리에선 자신의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해질 수 있음을 이유로 타인의 교육시설 참여 기회를 제한할 것을 청구하거나, 자신의 교육시설 참여 기회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이유로 타인의 교육시설 참여 기회를 제한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지 않는다.

② 학교 안팎의 교육영역에서 국가는 헌법 제31조에 의하여 독자적인 교육권한을 부여받았으므로, 학교 교육에서만 아니라 학교 밖의 교육영역에서도 원칙적으로 부모의 교육권보다 국가의 교육권한이 우위를 차지한다.

③ 의무교육의 실시범위와 관련하여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31조 제3항은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에 관한 직접적인 효력규정으로서 무상의 중등교육을 받을 권리도 헌법상 권리로서 보장된다.

④ 헌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교육을 받게 하고 특히 경제적 약자가 실질적인 평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 정책을 실현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가 인정되므로, 이로부터 국민이 직접 실질적 평등교육을 위한 교육비를 청구할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있다.
40. 다음 환경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환경권을 행사함에 있어 국민은 국가로부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 국가에 대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기도 하는 바, 환경권은 그 자체가 종합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② 환경침해는 사인에 의해서 빈번하게 유발되므로 입법자가 그 허용 범위에 관해 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환경피해는 생명·신체의 보호와 같은 중요한 기본권적 법익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정한 경우 국가는 사인인 제3자에 의한 국민의 환경권 침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기본권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가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때에는 국가가 기본권 보호에 필요한 최적의 조치를 취하였는가 하는 ‘과잉금지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④ 헌법 제35조 제1항의 국가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에는 기후변화로 인하여 생활의 기반이 되는 제반 환경이 훼손되고 생명·신체의 안전 등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하여 기후변화의 원인을 줄여 이를 완화하거나 그 결과에 적응하는 조치를 하는 국가의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의 의무도 포함된다.

## 범죄학

1. 다음 중 범죄통계와 암수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한국의 공식 범죄통계는 경찰청이 발간하는 ‘범죄통계’,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법원행정처의 ‘사법연감’ 등이 있다.
- ② 범죄시계란 매 시간마다의 범죄발생현황을 표시한 것을 말하며, 인구변화율을 반영하지 못하고 고정적인 시간을 비교 단위로 사용하고 있어서 통계적 가치는 거의 없다.
- ③ 자기보고식 조사는 응답자에게 자신의 범죄와 비행을 스스로 보고하도록 하여 암수범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직접적 조사방법에 해당한다.
- ④ 피해자조사는 범죄피해자로 하여금 과거의 직·간접적 범죄피해 경험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2. 다음 <보기>는 어떤 연구 방식에 대한 설명인가?

— < 보 기 > —

볼프강(Wolfgang), 피글리오(Figlio), 셀린(Sellin)은 1972년 공식 기록들을 사용하여 1945년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난 9,945명의 소년의 범죄 경력을 출생부터 1963년 18세에 이를 때까지 추적하였다. 그들 중 약 3분의 1(3,475명)이 경찰과 접촉이 있었으나 나머지 3분의 2(6,470명)는 경찰과 접촉이 없었다.

- ① 코호트(Cohort) 연구
- ② 횡단(Cross Sectional) 연구
- ③ 관찰(Observation) 연구
- ④ 실험(Experiment) 연구

3. 다음 중 실증주의 범죄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범죄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라 선택되는 것으로서, 처벌은 응보적 성격을 가져야 한다고 보았다.
- ② 범죄행위의 사회적 책임보다는 위법행위를 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였다.
- ③ 범죄는 생물학적·심리학적·사회적 요인 등 경험적으로 관찰 가능한 요인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고 보았다.
- ④ 범죄로 인한 이익보다 형벌로 인한 고통이 더 크다는 것을 인식시킴으로써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특별예방론을 중시하였다.

4. 다음 중 범죄 억제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네긴(Nagin)은 처벌에 대한 대응으로 예리한 순응자(Acute Conformist), 고질적 범죄자(Incorrigible), 억제가능자(Deterrable)로 구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 ② 포거스키(Pogarsky)와 피켈로(Piquero)는 범죄자가 실제 처벌을 받고 난 뒤에 다시 붙잡힐 가능성이 낮다고 추론을 하는 재설정효과(Resetting Effect)는 확실성의 효과를 증가시킨다고 주장하였다.
- ③ 경찰의 수와 범죄율 사이에는 두 방향의 인과관계가 존재하며 이를 동시적 인과성(Simultaneous Causation)이라고 한다.
- ④ 절대적 억제(Absolute Deterrence)란 국가가 부과하는 처벌의 위협이 비공식적 통제체계에 의해 확보된 억제를 넘어서는 것을 의미한다.

5. 로널드 클락(Ronald Clarke)의 합리적 선택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인간의 완벽한 합리성에 기초를 두고 있다.
- ② 심리학의 기대효용 원리에 기초한다.
- ③ 범죄자는 범죄참여(Involvement)에 대한 결정과 범죄사건(Crime Event)에 대한 결정을 한다고 주장한다.
- ④ 범행 대상물을 물색하는 것과 같은 범죄 수행 단계에 대한 의사결정은 범죄참여(Involvement)에 대한 결정에 포함된다.

6. 다음 중 브랜팅햄(Brantingham) 부부의 범죄패턴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범죄패턴이론은 범죄 및 범죄자의 행동에서 구분 가능한 일정한 패턴을 발견하고자 하며, 활동교점(Nodes)·경로(Paths)·경계(Edges)와 같은 환경적 요소를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 ② 활동교점(Nodes)은 거주지·직장 등 개인이 일상 생활에서 반복적으로 방문하는 장소를 의미하며, 경로(Paths)는 이런 장소들을 연결하는 이동 통로를 의미한다.
- ③ 잠재적 범죄인은 자신들이 쉽게 인식될 수 있는 ‘완충지역(Buffer Zone)’에서는 범죄행위를 피하려 한다고 주장하였다.
- ④ 범죄자는 일반인과 같은 정상적인 시·공간적 행동패턴을 갖지 않기 때문에 범죄자의 활동 공간이 목표지역과 교차하는 지점에서 범죄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7. 다음 중 생물학적 범죄학에 관련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롬브로조(Lombroso)는 신체적 특징을 통해 생래적 범죄자를 구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생래적 범죄자를 인간 진화의 초기 상태로 퇴행하는 격세유전으로 설명하였다.
- ② 가계 연구는 범죄에 대한 생물학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 ③ 행동 유전학 연구는 인간의 특성과 행동이 어느 정도가 유전적 영향에 의한 것인지, 어느 정도가 환경적 영향에 의한 것인지를 분석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한다.
- ④ 높은 각성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경우 낮은 각성 수준을 가진 사람들보다 더욱 자극을 추구하고 충동적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

8. 다음 <보기>는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 보 기 >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의 분해를 담당하는 것으로, 이것의 활동성이 비정상적이라면 시냅스 상의 신경전달물질들이 적절히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행동 및 정신 병리적 증상들이 야기된다.

- ① 모노아민 산화 효소 A(MAO-A)
- ② COMT 효소
- ③ GABA
- ④ 5-HTT

9. 다음은 헤어(Hare)의 사이코패스 체크 리스트(PCR-R)와 관련된 설명이다. <보기1>과 <보기2>를 가장 적절하게 연결한 것은?

< 보 기 1 >

- ㉠ 정서적 측면(Affective)
- ㉡ 생활형태(Life Style)
- ㉢ 대인관계(Interpersonal)
- ㉣ 반사회성(Antisocial)

< 보 기 2 >

- A. 죄책감의 부족(Lack of Remorse of Guilt)
- B. 충동성(Impulsivity)
- C. 청소년 비행(Juvenile Delinquency)
- D. 병적인 거짓(Pathological Lying)

	㉠	㉡	㉢	㉣
①	A	B	C	D
②	A	B	D	C
③	B	A	D	C
④	D	B	C	A

10. 다음 <보기> 중 슈나이더(Schneider)의 사이코패스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 기 >

- ㉠ 발양성 사이코패스는 다혈질적이고 활동적인 특성을 가지며, 상습 사기범이나 상습 누범자에게서 흔히 발견된다.
- ㉡ 자신결핍성 사이코패스는 염세적이고 비관적인 사고에 빠져 항상 우울하게 지내고 자책적인 특성을 가지며, 적극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기보다는 자살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 ㉢ 무정성 사이코패스는 인간이 고유하게 갖는 고등감정인 타인에 대한 동정심이나 연민의 정을 느끼지 못하는 특성을 가지며, 롬브로조(Lombroso)의 생래적 범죄인이나, XYY형 범죄인 등이 이에 해당한다.
- ㉣ 기분변이성 사이코패스는 기분의 동요가 심하여 행동을 예측할 수 없으며, 크레펠린(Kraepelin)이 말하는 ‘욕동인’이 이에 해당한다.
- ㉤ 무력성 사이코패스는 심신의 부조화 상태를 늘 호소하면서 관심을 자기에게만 돌리고 타인의 동정을 바라는 특성이 있으며, 신경질적이지만 범죄와의 연관성은 적다.

- ① 2개
- ② 3개
- ③ 4개
- ④ 5개

11. 다음 중 행동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스키너(Skinner)의 조작적 조건화에 의하면 행동은 기여된 보상 및 처벌을 통하여 강화된 ‘지속적 조건화’ 또는 ‘학습에 대한 반응’이라고 보았다.
- ② 반두라(Bandura)는 모든 사람은 공격행위의 특성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직접적인 경험이나 관찰을 통한 학습이 범죄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③ 반두라(Bandura)에 의하면 다른 사람이 보상이나 처벌을 받는 것을 관찰함으로써, 행동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대리강화’라고 보았다.
- ④ 행동이론에 의하면 범죄행위는 비정상적 성격이나 도덕적 미성숙의 표현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그렇게 반응하도록 학습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12. 다음 중 사회 해체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버식(Bursik)은 도시를 식물과 동물의 생태적 관점으로 보고 인간 생태계도 침입, 지배, 승계라는 유사한 과정을 겪는다고 보았다.
- ② 콘하우저(Kornhauser)는 쇼(Shaw)와 맥케이(Mckay)의 이론이 사회해체이론과 하위문화이론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이 중에 사회해체이론이 비행에 더 근본적인 원인이라 주장하였다.
- ③ 사회 해체가 발생하는 구조적 요소는 빈곤, 인종적 동질성, 거주 불안정성이다.
- ④ 전이지역(Zone of Transition)은 거주하는 인종에 따라 범죄율이 변화한다.

13. 다음 중 샘슨(Sampson)의 집합효율성(Collective Efficacy)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집합효율성이란 공동선을 위하여 개입하려는 지역주민의 사회적 응집력을 말한다.
- ② 집합효율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청소년들이 그들의 지혜를 폭력과의 대면을 피하는 데 사용할 줄 알고 자신의 지역에서는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를 ‘거리 효율성(Street Efficacy)’이라고 한다.
- ③ 집합효율성은 비공식적 사회통제, 제도적 사회통제, 공식적 사회통제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으며, 학교와 교회 등의 사회제도는 공식적 사회통제에 해당한다.
- ④ 사회해체가 진행된 지역에서는 집합효율성이 낮기 때문에 주민들에 의한 비공식적 사회통제가 약화되고, 이는 범죄율을 증가시키게 된다고 보았다.

14. 다음 중 머튼(Merton)의 아노미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문화적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 간의 불일치가 아노미 상태를 유발한다고 보았다.
- ② 하류계층의 범죄를 설명하는 데에는 유용하지만, 중산층이나 상류계층의 범죄를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 ③ 아노미에 대한 적응양식 중 ‘동조형’은 문화적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 양자를 승인하는 것을 의미하며, 안정된 사회에서의 일반적 적응양식이다.
- ④ ‘도피형’은 문화적 목표를 추구하지도 않고 제도화된 수단에 따라 행동하지도 않는 유형을 의미하며, 반사회적 적응양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15. 다음 중 클로워드(Cloward)와 올린(Ohlin)의 차별적 기회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코헨(Cohen)이 하나의 비행하위 문화를 제시한 데 반해 3개의 비행 하위문화를 제시하였다.
  - ② 합법적인 기회를 박탈당한 청소년들이 택하는 하위문화는 그들이 접근할 수 있는 불법적인 기회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고 주장하였다.
  - ③ 갈등적 하위문화는 마약과 알코올 중독에 초점이 맞추어지며, 이러한 문화 속에서 발견되는 주민 유형은 이중적 실패자라고도 불린다.
  - ④ 범죄적 하위문화는 절도, 갈취, 사기 같은 재산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조직된 소년갱단에서 나타난다.
16. 다음 중 애그뉴(Agnew)의 일반 긴장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긴장을 유발하는 3가지 주요 요인으로 긍정적 목표의 성취 실패, 긍정적 자극의 소멸, 부정적 자극의 소멸을 제시하였다.
  - ② 긍정적 목표의 성취 실패는 열망과 기대 사이의 격차, 열망과 실제 성취 사이의 격차, 기대와 실제 성취 사이의 격차, 공정한 결과라고 생각 되는 것과 실제 결과 사이의 격차 등의 하위 유형을 포함하고 있다.
  - ③ 친구나 가족의 사망, 연인과의 이별 등은 부정적 자극의 소멸에 포함된다.
  - ④ 범죄나 일탈은 긴장이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 일으킬 때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우울은 범죄와 일탈의 가능성이 가장 큰 부정적인 감정이다.
17. 다음 중 제도적 아노미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아메리카 드림은 성취지향, 개인주의, 합리주의, 보편주의적 특징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 ② 탈콧 파슨스(Talcott Parsons)의 사회 제도적 관점을 머튼(Merton)의 아노미 이론에 결합한 이론이다.
  - ③ 정치적 제도가 다른 제도들을 지배하는 제도적 불균형이 미국 사회가 높은 범죄율을 가지는 중요한 이유라고 주장하였다.
  - ④ 제도적 불균형은 평가절하, 수용, 침투, 탈상품화를 통해 나타나게 된다.

18. 다음 중 서덜랜드(Sutherland)가 주장한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범죄학을 법제정, 법위반, 법위반에 대한 대응을 포함하는 학문으로 정의하였다.
  - ② 차별적 교제(Differential Association)이론에서 범죄행위의 학습과정 기제는 일반행위의 학습과정 기제와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 ③ 집단 또는 사회의 범죄율 차이를 설명하는 차별적 사회조직(Differential Social Organization) 이론을 제시하였다.
  - ④ 범죄행위의 학습은 범죄 기술, 구체적 동기나 욕구, 합리화, 태도 등을 포함한다.
19. 다음은 에이커스(Akers)와 버지스(Burgess)가 주장한 차별적 강화 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1>과 <보기2>를 가장 적절하게 연결한 것은?

< 보 기 1 >

㉠ 행위에 대해 고통이나 불쾌한 사건을 피하도록 한다.

㉡ 행위에 대해 처벌을 제공한다.

㉢ 행위에 대해 이익이나 기쁨을 제시한다.

㉣ 행위에 대해 이익이나 기쁨을 박탈한다.

< 보 기 2 >

A. 적극적 강화(Positive Reinforcement)

B. 소극적 강화(Negative Reinforcement)

C. 적극적 처벌(Positive Punishment)

D. 소극적 처벌(Negative Punishment)

	㉠	㉡	㉢	㉣
①	B	C	A	D
②	B	C	D	A
③	C	B	A	D
④	C	D	A	B

20. 다음 중 뒤르켐(Durkheim)의 이론에서 주장하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회 분업론’에서 사회변동 과정은 더 원초적인 기계 사회로부터 더 진보한 유기적 사회로 나아간다고 주장하였다.
- ② 범죄는 유기적 사회에서는 정상적으로 간주되는 반면 기계적 사회에서는 병리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다.
- ③ ‘자살론’에서 동물의 육체적 성질은 그들의 욕망에 자연적인 한계를 가지도록 하는 데 비해, 인간의 욕망은 한계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 ④ 자살을 사회 통합과 규제를 기준으로 4가지로 구분하였으며, 사회 통합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살을 이기적 자살, 규제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살은 아노미적 자살이라고 하였다.

21. 다음 중 나이(Nye)의 통제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회통제는 직접통제 외에 내적통제, 간접통제, 욕구를 충족시킬 합법적 수단의 이용가능성 등을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이다.
- ② 내적통제는 잘못을 했을 때 가정 내에서 부모가 억압적 수단을 사용하고 처벌을 부과함으로써 이후의 소년비행을 예방하는 방법이다.
- ③ 소년비행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가정에서의 비공식적 간접통제방법을 주장하였다.
- ④ 소년에 대한 통제가 없을 때에도 비행이 발생하지만 지나친 통제가 가해질 때에도 소년비행이 증가한다고 보았다.

22. 다음 중 갓프레드슨(Gottfredson)과 허쉬(Hirschi)가 주장한 자기 통제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자기 통제 이론은 모든 범죄가 아닌 일부 범죄를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② 낮은 자기 통제력은 불안정한 사회화, 특히 잘못된 학교 교육에서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 ③ 낮은 자기 통제력은 사회 환경의 변화에 의해 긍정적으로 변화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 ④ 자기 통제력이 범죄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요인이라 주장하면서 비행친구와 같은 요인들은 범죄의 요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23. 다음 중 허쉬(Hirschi)의 사회유대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유는 사회 구성원 간의 강한 유대감이 약화되거나 깨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 ② ‘애착(Attachment)’은 애정과 정서적 관심을 통하여 개인이 사회와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유대의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았다.
- ③ ‘참여(Involvement)’는 행위적 측면에서 개인이 사회와 맺고 있는 유대의 형태로서, 관습적 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④ ‘신념(Belief)’은 사람이 규범준수로 인한 사회적 보상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관한 것을 의미한다.

24. 다음 <보기> 중 사이크스(Sykes)와 마차(Matza)의 중화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보 기 >
- ㉠ 피해자의 부정 - 자신의 행위로 손상을 입거나 재산 피해를 본 사람이 없다고 함으로써 자신의 비행을 합리화
  - ㉡ 책임의 부정 - 범죄행위는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난 어쩔 수 없는 힘이나 우연한 사건에 의한 결과라며, 범죄가 단순히 자신의 잘못 때문만은 아니라고 합리화
  - ㉢ 비난자에 대한 비난 - 권위 있는 사람도 부패했거나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자신의 범죄행위는 비난받을 만한 것이 아니라고 정당화
  - ㉣ 상위 충성심에의 호소 - 자신의 행동이 더 큰 이익을 위한 것이며 가족, 친구 보호 등의 이유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5. 다음 중 낙인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베커(Becker)는 스스로를 일탈자로 인식하고 지속적인 일탈행위로 나아가는 과정인 자아낙인(Self - Label)을 강조하였다.
- ② 레머트(Lemert)는 1차적 일탈은 일시적 규범 위반으로 보고, 일탈자의 자아개념, 사회적 역할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 ③ 탄넨바움(Tannenbaum)은 악의 극화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범죄행위의 원인을 사회적으로 부여된 낙인의 결과라고 보았다.
- ④ 다이버전 프로그램은 체포된 청소년 범죄자를 공식체계와 더 접촉시키지 않고 ‘전환’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

26. 다음 중 페미니스트 이론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사이먼(Simon)은 자본주의가 노동자 계급을 착취하기 때문에 범죄가 발생한다는 마르크스주의 입장과 가부장제에 대한 페미니스트의 관점을 결합하였다.
- ② 애들러(Adler)는 여성이 더 많은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절도, 횡령, 화이트칼라 범죄를 저지를 기회가 많아져 여성에 의해 이러한 범죄가 증가할 것이라 주장하였다.
- ③ 체스니린드(Chesney-Lind)는 전통적인 여성의 고정관념에 부합되지 못하는 여성은 더 불리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④ 헤이건(Hagan)의 권력통제이론은 가부장적인 가정에서는 평등주의 가정에서보다 자녀들이 저지르는 비행과 범죄의 정도에 있어서 성별 차이가 뚜렷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27. 다음 중 발달범죄학과 관련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범죄성이 한평생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현상을 상태 의존성(State Dependence)이라 부른다.
- ② 패터슨(Patterson)과 동료들은 조기개시 비행 집단의 원인으로 비행친구 집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③ 모집단 이질성(Population Heterogeneity)은 사람들이 성숙함에 따라 변화하고 발전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생애 사건들은 범죄성의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 ④ 갓프레드슨(Gottfredson)과 허쉬(Hirschi)의 자기 통제이론은 모집단 이질성(Population Heterogeneity)을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28. 다음 중 샘슨(Sampson)과 라움(Laub)의 연령단계에 따른 비공식적 사회통제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론의 검증을 위해 20세기 글룩(Glueck)부부가 수집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 ② 범죄와 일탈의 원인이 모든 연령에서 같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 ③ 범죄가 안정적으로 지속되는 이유는 범죄와 이에 대한 불리한 반응이 반복되어 범죄궤적에 범죄자를 고착시키는 누적적 불이익(Cumulative Disadvantage) 때문이라 주장하였다.
- ④ 후속 연구에서는 생애 지속형 범죄자라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고 다양한 생애과정 궤적을 추정하는 연구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29. 다음 중 모핏(Moffitt)의 발달유형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반사회적 행위자를 청소년기 한정형과 생애지속형으로 구분하였다.
- ② 생애지속형 반사회적 행위자는 생물학적 성숙과 사회적 성숙 간에 성숙격차(Maturity Gap)에 의하여 반사회적 행위의 동기를 제공받는다고 보았다.
- ③ 생애지속형 반사회적 행위자는 청소년기 한정형 반사회적 행위자에 비하여 또래 집단의 영향력이 미비하다고 보았다.
- ④ 청소년기 한정형 반사회적 행위자는 신경생리적 요인이 아닌 사회적 모방에 의하여 범죄를 지속한다고 보았다.

30. 다음 중 이론 통합의 목적과 통합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론 통합의 목적은 범죄현상을 보다 종합적이고 설명력 있게 이해하기 위함이다.
- ② 수직적 통합이란 서로 다른 이론들을 보다 구체적인 수준에서 위계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 ③ 개념적 통합은 한 이론에서 나타난 특정 개념이 다른 이론에서 나타난 특정 개념과 같다는 것을 전제로 이론을 통합하는 방식이다.
- ④ 순차적 통합이란 한 이론의 명제가 다른 이론의 명제와 순차적으로 연결될 수 있을 때 복수의 이론을 인과적 순서에 따라 재배열하는 방식이다.

31. 다음 중 손베리(Thornberry)의 상호작용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회통제, 사회학습 이론의 요소를 통합한 이론으로 다양한 사회구조는 사회통제와 사회학습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
- ② 사회통제와 사회학습의 영향력은 일관적이지 않고 발달단계에 따라 변화한다.
- ③ 사회통제와 사회학습 그리고 비행 사이의 관계가 모두 단일한 방향으로 작용한다.
- ④ 비행에 대한 부모의 영향은 청소년기 초반에는 강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청소년기 후반에는 중요성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한다.

32. 다음 중 티틀(Tittle)의 통제균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통제 부족(타인을 통제하기보다 타인의 통제를 받는)’을 경험하는 사람은 착취적이거나 퇴폐적 비행을 저지르기 쉽다고 주장하였다.
- ② 통제비율(Control Ratio)이란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통제량과 자신이 받는 통제량의 비율을 의미한다.
- ③ 불균형한 통제비율은 자율성의 욕구와 기본적인 신체적·정신적 욕구와 결합해 비행의 원인이 된다고 보았다.
- ④ 통제비율(Control Ratio)은 고정된 것이 아니며 장소와 시간, 상황에 따라 변화한다고 보았다.

33. 다음 중 엘리엇(Elliott)과 동료들의 통합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비행행위를 설명하기 위하여 긴장이론, 통제이론, 사회학습이론의 통합모델을 제시하였다.
- ② 전국청소년조사(National Youth Survey)의 종단적 자료를 사용해 자신들의 모형을 검증하였다.
- ③ 구조적 긴장이 개인의 사회적 유대를 약화시키고, 약화된 유대가 일탈적 또래집단과의 접촉을 촉진하여 학습된 일탈행동으로 이어지는 순차적 경로를 제시하였다.
- ④ 사회적 유대가 강하고 관습적 목표에 대한 전념 정도가 높은 사람은 제도적 기회가 차단되어 긴장이 발생하더라도 불법적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34. 다음 <보기> 중 홈즈(Holmes)와 드버거(Deburger)가 분류한 연쇄살인범의 유형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보 기 >

  - ㉠ 망상형(Visionary)
  - ㉡ 이익 추구형(Expedience)
  - ㉢ 쾌락주의자형(Hedonistic)
  - ㉣ 권력통제형(Power/Control)
  - ㉤ 사명감형(Missionary)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35. 다음 <보기>의 경찰청에서 분류한 사이버범죄의 유형 중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보 기 >
- ㉠ 해킹

㉡ 서비스거부공격(DDoS등)

㉢ 악성 프로그램

㉣ 사이버 사기

㉤ 사이버 금융범죄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36. 다음 <보기>의 설명이 지칭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 < 보 기 >
- 무색·무취·무미로서 통상 분말로 제조되나 정제·캡슐제·액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유통되며 주로 각설탕, 껌, 과자, 압지, 우표 뒷면 등에 묻혀서 사용한다.

○ 곡물, 곰팡이 또는 보리 맥각에서 발견되어 이를 분리·가공·합성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가장 강력한 환각제로 알려져 있다.

- ① L.S.D

② 엑스터시

③ 페이오틀

④ 메스암페타민

37. 다음 중 에이버딘스키(Abadinsky)가 주장한 조직 범죄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조직의 목적이나 이익을 위하여 일부 정치적 참여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념적 특징을 갖는다.

② 상급조직원의 추천을 받거나 일정한 행동으로 자격이 증명된다면 누구나 조직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방성의 특징을 갖는다.

③ 조직범죄는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기 때문에 구성원 참여가 비영속적인 특징을 갖는다.

④ 전문성이나 조직 내 위치에 따라 임무와 역할이 철저하게 분업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분업화의 특징을 갖는다.

38. 다음은 상황적 범죄예방 이론의 5가지 목표와 세부적 기법이다. <보기1>과 <보기2>를 가장 적절하게 연결한 것은?

- < 보 기 1 >
- ㉠ 변명의 제거

㉡ 자극의 감소

㉢ 보상의 감소

㉣ 위협의 증가

㉤ 노력의 증가

- < 보 기 2 >
- A. 약물과 알코올 통제

B. 좌절감과 스트레스 감소

C. 소유자 표시

D. 자연적 감시

E. 범죄 무기 통제

	㉠	㉡	㉢	㉣	㉤
①	A	B	C	D	E
②	B	A	D	C	E
③	E	B	D	C	A
④	E	B	C	D	A

39. 다음 중 코헨(Cohen)과 펠슨(Felson)이 제시한 매력적인 절도 대상(VIVA 모델)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치(Value)

② 관성(Inertia)

③ 가시성(Visibility)

④ 이용할 수 있는(Available)

40. 다음 <보기>는 레페토(Reppetto)가 제시한 전이(Displacement) 중 무엇에 관한 내용인가?

< 보 기 >

범죄 대상에 대한 강화조치로 인하여 절도범죄가 어려워지자, 절도 범죄자들은 은행에서 무장 강도를 저지르게 된다.

- ① 대상적 전이

② 전술적 전이

③ 기능적 전이

④ 영역적 전이

행정법

1.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위법한 행정처분일지라도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면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
  - ② 행정청이 공적 견해를 표명할 당시의 사정이 사후에 변경된 경우에는 그 공적 견해가 더 이상 개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③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의 공표만으로 상대방은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④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
2.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는 신고로서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행정기관의 내부업무 처리절차로서 수리를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행정청이 수리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 ② 법령 등에서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고,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으며, 신고가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하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 ③ 자기완결적 신고로서 적법한 요건을 갖춘 영업 신고를 하였으나 행정청의 수리가 거부된 경우, 영업행위를 하게 되면 무신고영업에 해당한다.
  - ④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행정청의 수리행위에 신고필증 교부 등 행위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3.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던 법규명령은 사후적인 법률에 의해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었다고 하여 그때부터 유효가 될 수 없다.
  - ② 법률의 위임에 의해 유효하게 성립된 법규명령은 이후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없어지더라도 효력에 영향이 없다.
  - ③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재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위임 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중의 특정 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는 재위임이 허용된다.
  - ④ 법규명령의 위임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 결정이 선고되더라도 그 위임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규명령은 원칙적으로 별도의 폐지행위가 있어야 효력을 상실한다.
4.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청이 미리 공표한 처분기준인 행정규칙을 따랐는지 여부는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결정적인 지표가 되지 못하지만, 행정청이 미리 공표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결정적인 지표가 된다.
  - ② 상위법령에서 세부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이를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한 경우, 그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 ③ 어떠한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면, 그 처분이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 하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 ④ 행정규칙의 내용이 상위법령이나 법의 일반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면 법질서상 당연히무효이고, 행정 내부적 효력도 인정될 수 없다.



5.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재량행위의 경우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한다.
- ② 처분의 근거법령이 행정청에 처분의 요건과 효과 판단에 있어 일정한 재량을 부여하였으나, 행정청이 자신에게 재량권이 없다고 오인하여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써 처분 상대방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를 전혀 비교衡量하지 않은 채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 ③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 ④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는 특정인에게 공유수면 이용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처분으로서 그 처분의 여부 및 내용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6. 영업의 양도·양수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대한 인가를 한 후, 그 양도·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운송사업면허취소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 ② 사실상 영업을 양도·양수되었지만 승계신고 및 수리처분이 있기 이전에 양도인이 양수인으로 하여금 영업을 하도록 허락한 경우, 양수인의 영업 중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은 양수인에게 귀속된다.
- ③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은 종전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행정청은 종전 영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 ④ 영업양도행위가 무효임에도 행정청이 승계신고를 수리하였다면, 양도자는 민사쟁송으로 양도·양수 행위의 무효를 구해야지, 막바로 행정소송으로 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7. 인·허가 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인·허가 의제의 효과는 주된 인·허가의 해당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된다.
- ② 주된 인·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서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그 다른 법률의 모든 규정들까지 적용된다.
- ③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가 위법함을 다투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를 구할 것이 아니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 ④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그 처분사유로 건축 불허가사유뿐만 아니라 형질변경불허가사유나 농지전용불허가사유를 들고 있다면 그 건축불허가 처분 외에 별개로 형질변경불허가처분과 농지 전용불허가처분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8.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청은 사정이 변경되어 종전의 부관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종전의 부관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다면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위법하게 되거나 그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 ③ 행정처분에 붙은 부담인 부관이 제소기간의 도과로 확정되어 이미 불가쟁력이 생긴 경우에는 그 부담의 이행으로서 하게 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도 그 효력을 다룰 수 없다.
- ④ 어업면허처분을 함에 있어 면허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 그 면허의 유효기간은 행정 행위의 부관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행정행위의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9. 선결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 ② 민사소송에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고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여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③ 영업허가취소처분이 나중에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었더라도 그 영업허가취소처분 이후의 영업행위는 무허가영업에 해당한다.
  - ④ 「자동차관리법」상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그 운행정지명령이 적법한 것이어야 하고, 그 운행정지명령이 당연무효는 아니더라도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된다면 「자동차관리법」상 명령 위반죄는 성립할 수 없다.
10. 행정처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 ②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행정청이 그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
  - ③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나,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④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인 등 처분을 한 경우, 이러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다.

11. 하자의 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선행처분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하자는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아니한다.
  - ② 건물철거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니고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면 건물철거명령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 대집행계고처분의 효력을 다룰 수 없다.
  - ③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할 것이고, 그 후행행위인 건축물철거 대집행계고처분 역시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
  - ④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합하여 1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경우에도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기면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룰 수 없다.
12. 甲은 A법률에 근거하여 부담금 부과처분을 받았으나, 처분 이후에 처분의 근거가 되었던 A법률의 규정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위헌결정으로 인해 甲에 대한 부담금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 ② 甲이 부담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부담금 부과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더라도 위헌결정의 소급효로 인해 이미 납부한 부담금의 반환청구가 인정된다.
  - ③ 甲이 아직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담금 부과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담금에 대한 강제집행이 허용된다.
  - ④ 甲이 위헌결정을 이유로 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3. 다음 <보기> 중 「행정절차법」상 확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보 기 >

- ㉠ 행정청은 다른 행정청과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처분에 대하여 확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확약을 하기 전에 그 절차를 거쳐야 한다.
- ㉡ 확약의 성격상 어떠한 처분을 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확약은 할 수 없다.
- ㉢ 행정청은 확약을 한 후에 확약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을 정도로 법령 등이나 사정이 변경된 경우 확약에 기속되지 아니한다.
- ㉣ 확약은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 확약이 위법한 경우라도 행정청은 이에 기속된다.

- ① ㉠, ㉡
- ② ㉠, ㉢, ㉤
- ③ ㉠, ㉣, ㉤
- ④ ㉠, ㉤

14.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지도가 강제성을 띠지 않은 비권력적 작용으로서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행정기관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 ② 행정지도가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상대방이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 사항을 적은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면 그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직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③ 위법한 행정지도에 따라 사인의 신고행위가 허위신고행위에 이르렀다면 원칙적으로 그 사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 ④ 단순한 행정지도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상당히 강하게 갖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다.

15.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 경우에도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며,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또한 이와 같다.
- ②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있어서까지 그 상대방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③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도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없다.
- ④ 행정청은 침익적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지만, 수익적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16. 제재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은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 ② 일정한 법규 위반사실이 행정처분의 전제사실이자 형사법규의 위반사실이 되는 경우, 형사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그 위반사실을 이유로 제재처분을 하였다면 절차적 위반에 해당한다.
- ③ 여러 처분사유에 관하여 하나의 제재처분을 하였을 때 그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처분사유들만으로도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과징금은 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그 부과처분 당시까지 부과관청이 확인한 사실을 기초로 일의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며,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추후에 부과금 산정기준이 되는 새로운 자료가 나올 경우에는 과징금액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유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17. 다음 <보기>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보 기 >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당해 공공기관이 작성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경위를 불문하고 당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
  -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가 비공개를 요청하였다고 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 ㉢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하는 경우, 공공기관은 종전 청구와 동일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 ㉣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를 공개는 하되,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하는 결정을 한 경우, 이는 정보공개방법만을 달리한 것이므로 일부 거부처분이라 할 수 없다.
  - ㉤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이상, 그 자체로 공개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고, 그 외에 추가로 어떤 법률상 이익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8.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계고를 함에 있어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나,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②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서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일 때에도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필요하다.
- ③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 대하여도 부과될 수 있다.
- ④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으며,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19.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상 즉시강제는 개인에게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그 긴급성을 고려할 때 원칙적으로 법률의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 ②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행정상 즉시강제는 그 본질상 급박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법관의 영장을 기다려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 ③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피구호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경찰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 ④ 「식품위생법」상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는 조치는 행정상 즉시강제라고 볼 수 없다.

20.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②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③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 ④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

21.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행정사무인 변호사등록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임직원이나 피용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대한변호사협회는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② 의용소방대원은 국가기관이라 할 수 없으므로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재판사무의 특수성과 그 재판과정의 잘못에 대하여는 따로 불복절차에 의하여 시정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더라도, 법관이 법령규정을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다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
- ④ 불법어로행위자가 단속반의 추적을 피해 해상 도주를 하다 배가 좌초되어 바다로 추락사망한 사안에서, 당시 단속공무원들의 결정이 결과론적·사후적 관점에서 최선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평균인이 통상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22. 「국가배상법」 제5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실상 군민(郡民)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던 도로 옆의 암벽으로부터 떨어진 낙석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도 동 사고지점 도로가 군(郡)에 의하여 노선인정 기타 공용개시가 없었으면 이를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이라고 할 수 없다.
- ② 가변차로에 설치된 두 개의 신호등에서 서로 모순되는 신호가 들어오는 오작동이 발생하였고 그 고장이 현재의 기술수준상 부득이한 것이라면,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없으므로 영조물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
- ③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여기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란 물적 하자 뿐만 아니라 이용상 하자 또는 기능상 하자도 포함 된다고 보아야 한다.
- ④ 승용차 운전자가 편도 2차선의 국도를 진행하다가 반대차선 진행차량의 바퀴에 튕기어 승용차 앞 유리창을 뚫고 들어온 쇠파이프에 맞아 사망한 경우, 22분보다 더 짧은 간격으로 일일이 순찰하면서 낙하물을 제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국가에게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23. 「행정심판법」상 임시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심판위원회의 임시처분결정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며 직권으로 할 수는 없다.
- ②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 ③ 행정심판위원회는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에도 임시처분을 할 수 있다.
- ④ 「행정심판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행정 심판청구가 계속 중일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

24.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손실보상액 산정에 있어 ‘당해 공공사업’과 상관없는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배제하여서는 안 된다.
  - ②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구체적인 재산권의 이용을 제한하는 공용제한이 아니므로 헌법 제23조 제3항을 위반하여 개성공단 투자기업인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③ 구 「수산업법」상 적법한 어업허가를 받고 허가 어업에 종사하던 어민이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으로 피해를 입게 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관련 보상법령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피해어민들에게 손실보상을 하여 줄 의무가 있다.
  - ④ 코로나19의 예방을 위한 집합제한 조치로 인하여 음식점을 영업하는 청구인들의 영업이익이 감소하였다면 그 손실을 보상하지 않는 것은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25. 「행정기본법」상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처분의 재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이의신청은 행정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가 할 수 있고, 제3자는 할 수 없다.
  - ③ 처분의 재심사 결과 중 처분을 유지하는 결과에 대해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수단을 통하여 불복할 수 있다.
  - ④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을 통하여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처분의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26. 다음 <보기> 중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보 기 >

  - ㉠ ‘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재결’은 「행정심판법」에 존재하는 재결의 유형이 아니다.
  - ㉡ 인용재결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그러한 재결에 기속되므로 이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 「행정심판법」상 거부처분의 취소재결에 대한 재처분의무는 없으므로 거부처분취소 심판보다 의무이행심판이 더 효과적이다.
  - ㉣ 적법한 행정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본안심리를 하지 않고 각하한 재결은 재결에 고유한 하자가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재결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27.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인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의 불기소결정은 「검찰청법」상 항고와 재항고,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정신청에 의해서만 불복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② 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서 정한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취지의 기각결정 또는 그 취지의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③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은 결격사유가 있을 때 법률상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므로,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퇴직사유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 ④ 어떠한 처분에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절차를 준수하였는지는 소송요건 심사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28. 협의의 소의 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파면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당연퇴직된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은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②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그 효과가 소멸되었으나, 부령인 시행규칙 등의 형식으로 정한 처분기준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삼아 장래의 제재적 행정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③ 도지사가 도에서 설치·운영하는 지방의료원을 폐업하겠다는 결정을 발표한 후 폐업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행하였고 법적 절차 및 청산이 완료된 사안에서, 도지사의 폐업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

④ 소송 계속 중 처분청이 다툼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 그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완전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소의 이익이 소멸한다.

29.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등에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상대방이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② 제소기간 적용에 있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구체적으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한 날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③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는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이지만,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④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한 제소기간 내에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30.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령이 특정한 행정기관 등으로 하여금 다른 행정기관을 상대로 제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에 따르지 않으면 그 행정기관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그 제재적 조치의 상대방인 행정기관 등에게 항고소송 원고로서의 당사자 능력과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다.

② 「국적법」상 귀화불허가처분이나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변경불허가처분, 강제퇴거명령 등을 다툼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적법하게 입국하여 상당한 기간을 체류하고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 내지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보호가치 있는 이해관계를 형성한 경우에는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③ 치과의원을 경영하는 자는 그 치과의원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건물의 용도를 치과의원을 개설할 수 있는 의원으로서의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한 관할 행정청의 용도변경처분에 대해 그 취소를 구할 소익이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그 처분으로써 이루어지는 행위 등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영향권 밖의 주민들은 자신의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있음을 입증하여야만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31.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할 행정청의 인가 이전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의 법적 성질은 당사자소송이다.
  - ② 공무원의 연가보상비청구권은 법령상 정해진 요건이 충족되면 그 자체만으로 지급기준일 또는 보수지급기관의 장이 정한 지급일에 구체적으로 발생하므로, 행정청의 연가보상비 부지급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조합과 조합장 또는 조합임원 사이의 선임·해임 등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성질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이므로, 그 조합장의 지위를 다투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에 의한다.
  - ④ 구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는 공무원연금 관리공단(현 공무원연금공단)의 지급결정으로 구체적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연금 관리공단의 급여결정은 행정처분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32. 행정청의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구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포함)」은 관계 행정청이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서 가옥 기타 축조물의 신축 등을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할부대장과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관계 행정청을 구속하지 않으므로, 군 당국의 동의가 없더라도 관계 행정청의 건축허가가 금지되지 않는다.
  - ② 건축허가권자가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그 처분 사유로 구 「소방법」상 소방서장의 건축부동의 사유를 들고 있다고 하여 건축불허가처분 외에 별개로 건축부동의처분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 ③ 공증인이 직무수행을 하면서 공증인의 감독기관인 법무부장관이 제정한 ‘집행증서 작성사무 지침’을 위반한 경우 「공증인법」상의 직무상 명령을 위반한 것이다.
  - ④ 관보에의 게재나 공표는 훈령의 효력요건은 아니지만, 처분의 기준이 되는 훈령은 공표하여야 한다.

33. 조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조례안에 대한 교육감의 재의요구권한은 조례안의 완성에 대한 조건부의 정지적인 권한에 지나지 않으므로 시·도의회는 재의결 전에는 언제든지 재의요구를 철회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조례안에 법령 위반의 사유가 있으면 직접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주무부장관, 시·도지사에게 의해 제기되는 위법한 조례안의 재의결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은 사전적·추상적 규범통제의 성질을 갖는다.
  - ④ 조례 자체로 인하여 직접 그리고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행정소송을 통한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그 권리구제의 수단으로서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
34. 공무원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가공무원이 파산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결정 또는 면책취소가 확정된 때에만 당연퇴직된다.
  - ② 소청심사위원회가 사의표시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의원면직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후 징계권자가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국가공무원법」상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 ③ 징계사유인 성희롱 관련 형사재판에서 성희롱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실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
  - ④ 「교육공무원법」상 승진후보자명부에 의한 승진 심사방식으로 행해지는 승진임용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던 후보자를 승진임용인사 발령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처분에 해당한다.

35. 경찰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어 그 주최 또는 참가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집회시위가 장차 특정 지역에서 개최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이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 그 집회시위에 참가하기 위하여 출발 또는 이동하는 행위를 원천봉쇄하는 것은 허용된다.

②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에도 국가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 피구호자의 가족 등에게 피구호자를 인계할 수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경찰관서에서 피구호자를 보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경찰청장이 지문정보를 보관하는 행위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도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6. 공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재래시장 내 점포의 소유자는 인접 주민으로서 공물에 대한 고양된 일반사용권이 있으므로 점포 앞의 도로에 좌판을 설치·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일반적으로 도로는 그 이용관계로부터 당연히 그 도로에 관하여 특정한 권리나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개인에게 부여되는 것이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으므로, 일반적인 시민생활에 있어 도로를 이용만 하는 사람은 그 용도폐지를 다툼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③ 도로구역의 결정·고시는 있었지만 도로의 형태를 갖추지는 못한 국유토지도 그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토지에 대하여 도로확장공사 실시계획이 수립되어 일부 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④ 4륜스쿠터 임대업을 하면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관광객들에게 해수욕장 백사장에서 이를 운행하도록 임대한 경우, 공유수면의 특정 부분인 백사장을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유형적·고정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점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37.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이미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상세계획으로 관리되는 토지 위의 건물의 용도를 상세계획 승인권자의 변경승인 없이 임의로 판매시설에서 상세계획에 반하는 일반목욕장으로 변경한 경우, 행정청이 그 영업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영업소를 폐쇄한 처분은 적법하다.

② 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와 그 도면에 특정 토지가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음이 명백한데도 도시관리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후속 계획이나 처분에서 그 토지가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당연 무효이다.

③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 중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폐지할 때에는 관련된 여러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④ 폐기물처리사업의 적정통보를 받은 자가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구 「국토이용 관리법」상 국토이용계획의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관할 행정청이 이를 거부한 경우, 그 적정통보를 받은 자에게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
38. 처분사유의 추가·변경과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법령만을 추가·변경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아니다.

② 처분청이 거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기존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사유를 처분사유로 추가·변경한 것에 대하여, 처분상대방이 추가·변경된 처분사유의 실체적 당부에 관하여 해당 소송과정에서 심리·판단하는 것에 명시적으로 동의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허용 해서는 안 된다.

③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정청을 구속하는 효력인데, 원심판결의 이유는 위법하지만 결론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원심판결이 확정된 경우, ‘판결의 취지’는 상고심판결의 이유와 원심 판결의 결론을 의미한다.

④ 이익형량의 하자를 이유로 주민 등의 도시관리 계획입안 제안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입안 제안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행정청이 새로운 이익형량을 하여 적극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른 재처분의무를 이행한 것이다.

3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기업인 A는 입찰담합행위를 이유로 甲에 대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에 따른 2년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였다. 그 이후 A는 다시 甲에 대해 상위법령의 구체적 위임이 없는 A의 내부규정인 ‘공급자관리지침’에 근거하여 추가적인 ‘공급자등록 취소 및 10년의 공급자등록제한 조치’(이하 ‘제재조치’)를 통보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A는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개념요소인 행정청에 해당한다.

② A가 일정한 계약상 의무 위반 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특수조건 등의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했다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甲에게 그 중요 내용을 사전에 설명하여 계약내용으로 편입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다.

③ A의 ‘공급자관리지침’ 중 제재조치에 관한 규정들은 A가 상위법령의 구체적 위임 없이 정한 것이어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이다.

④ A의 ‘공급자관리지침’에 근거하여 등록된 공급업체에 대하여 하는 제재조치는 처분에 해당한다.

40. 다음 <보기>의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乙은 A해양경찰서장으로부터 도선사업면허를 받았다. A해양경찰서장은 乙의 노후 도선 1척에 대한 ‘신형 도선(319톤→715톤) 교체’와 ‘정원 증원(394명→504명)’을 허용하는 1차 도선사업면허 변경처분(이하 ‘1차 변경처분’)을 하였다. 경업자관계에 있는 甲은 1차 변경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 법원은 도선 척수의 변경은 없으나 정원 증원이 甲의 영업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를 인용하였다. 이후 A해양경찰서장은 715톤의 신형 도선 교체는 유지하면서 정원만 기존 정원보다 1명 적은 393명으로 감축하는 2차 도선사업 변경처분(이하 ‘2차 변경처분’)을 한 다음 항소하였다.

① 일반적으로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해당 업자들 사이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것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기존의 업자는 당해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② 2차 변경처분은 1차 변경처분을 완전히 대체하거나 그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정원 부분만 일부 감축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1차 변경처분 중 2차 변경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은 여전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③ ‘1차 변경처분 중 2차 변경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을 취소하는 부분이 확정되면 정원 부분만을 규율하는 2차 변경처분도 그 기초를 상실하여 실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정원 부분에 있어 2차 변경처분은 1차 변경처분에 비해 甲에게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甲은 2차 변경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행정학

1. 다음 중 사바스(Savas)가 구분한 네 가지 공공서비스 유형과 내용의 연결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요금재(toll goods)는 경합성은 띠지 않지만, 배제성을 띠므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소비자를 배제할 수 없다.
  - ② 집합재(collective goods)는 비용부담에 따라 서비스 혜택을 차별화하거나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한다.
  - ③ 공유재(common pool goods)는 배제성은 띠지 않지만 경합성을 띠므로 쉽게 고갈될 수 있는 재화로 과잉소비로 인한 비극이 발생할 수 있다.
  - ④ 시장재(private goods)는 경합성과 배제성이 모두 나타나는 재화로 소비자보호와 서비스 안전을 위해 행정의 개입도 가능하다.
2. 다음 중 행정과 정치 간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정치행정이원론은 정책의 과정에서 정책결정을 담당하는 정치와 정책집행을 담당하는 행정 간 관계를 경쟁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 ② 정치행정이원론은 행정의 관리기술적 성격을 강조하며, 특히 사회적 능률성의 제고를 위한 행정관리에 대한 관심을 환기한다.
  - ③ 정치행정일원론은 정책결정에서의 행정의 역할을 검증 가능한 사실에 대한 판단과 증거 기반의 의사결정으로 인식한다.
  - ④ 정치행정일원론은 행정의 정책형성 기능에 주목하며,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분배 등의 의사결정에서 행정의 적극적 역할을 환기한다.
3. 다음 중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식적인 명칭으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사용하지 않는다.
  - ② 인구 50만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인 시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다.
  - ③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계층 측면에서 중층제, 자치계층 측면에서는 단층제로 운영된다.
  - ④ 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지 및 분할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주민투표로 확정하는 과정을 거쳐 조례로써 정한다.

4. 다음 중 행정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효과성(effectiveness)은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직 내부적 관계가 강조된다.
  - ② 롤스(Rawls)에 따르면 무지의 베일에 가려진 원초적 상태에서 합리적인 인간은 최대극소화(minmax) 원리에 따라 의사결정을 한다.
  - ③ 수익자 부담원칙은 수평적 형평성, 대표관료제는 수직적 형평성과 각각 관계가 깊다.
  - ④ 사회적 능률성(social efficiency)은 디мок(Dimock)이 제시한 개념으로 과학적관리론의 등장과 함께 강조된다.
5. 다음 <보기>는 시장실패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한 학자들의 주장을 나열한 것이다. <보기>의 내용을 주장한 학자를 가장 옳게 짝지은 것은?

< 보 기 >

㉠	개인의 합리적 선택으로 부정적 외부효과가 야기된다면, 그에 비례한 과세를 통해 외부효과를 내부화할 수 있다.
㉡	거래비용이 '0'에 수렴한다면,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든 명확한 소유권의 설정으로도 경제주체들 간의 자발적 교환이 유도되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	자율적인 지역공동체 구성원들 간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된 자체적인 제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	㉢
①	오스트롬 (Ostrom)	코우즈 (Coase)	피구 (Pigou)
②	피구 (Pigou)	오스트롬 (Ostrom)	코우즈 (Coase)
③	오스트롬 (Ostrom)	피구 (Pigou)	코우즈 (Coase)
④	피구 (Pigou)	코우즈 (Coase)	오스트롬 (Ostrom)



6. 다음 중 행정이론과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행정학의 초기 연구자(Wilson, Goodnow, White 등)들은 행정의 역할을 민주성과 합법성을 달성하는 것으로 보았다.
- ② 과학적 관리론(Taylor)은 행정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의 특성에 맞는 개인별 맞춤형 전략을 과학적으로 찾고자 하였다.
- ③ 미노브룩(Minnowbrook) 회의에 참여했던 일부 학자(대표적으로 Waldo)들은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있어서 행정의 적극적 역할을 옹호했다.
- ④ 신공공서비스론(Denhardt)은 가외적 장치의 지수적 증가가 실패 확률을 산술적으로 감소시키는 현상에 주목하여, 가외적 장치의 정리와 제거를 강조하였다.

7. 다음 두 사람의 대화에서 설명하고 있는 정부실패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 보 기 >

철수 :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서비스는 무형(無形)성을 가지고 있어,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과는 달리 생산함수를 설정하기 어려워.

영희 : 그래서 정부의 성과를 관리하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정부가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였는지를 두고 정부의 성과를 측정하는 경우가 대표적이야.

철수 : 하지만, 정부는 누군가와 경쟁하지도 않고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계속 공공서비스를 생산해야 해.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상황 자체가 문제야.

- ① 과다수요 및 수요의 왜곡
- ② X-비효율성
- ③ 파생적 외부효과
- ④ 배분적 비효율성

8. 다음 <보기> 중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보 기 >

- ㉠ 법학의 배경을 가진 제도주의는 개인의 행태를 조직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제도를 행정 현상의 설명변수로 규정하며, 기관이나 직제를 기술(記述)하는데 관심을 가졌다.
- ㉡ 역사학의 배경을 가진 제도주의는 제도의 형성을 역사적 우연성이나 기존 제도의 발달 경로에서 찾으며, 기존의 제도가 현재의 제도 선택을 제약한다고 설명한다.
- ㉢ 경제학의 배경을 가진 제도주의는 제도의 형성은 도구적 합리성이 아닌 사회적 정당성의 논리에 의존한다고 인식한다.
- ㉣ 사회학의 배경을 가진 제도주의는 제도를 개인들 간 이루어지는 교환과 거래의 균형에 기반한 제도적 동형화의 산물로 이해한다.

-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9. 다음 중 살라몬(Salamon)이 제안한 정책수단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공서비스 전달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증가할수록 정책수단의 직접성은 증가한다.
- ② 정책대상자로부터 자발적인 협력을 설득하기 위한 정책수단은 낮은 강제성을 특징으로 한다.
- ③ 공공서비스의 전달을 위해 기존의 정책수단이 활용될 수 있다면, 정책수단의 자동성은 높은 수준으로 평가 받을 수 있다.
- ④ 공공서비스를 전달하는 수단의 사회적 중요성과 파급효과가 현저할수록, 해당 정책수단의 가시성은 증가한다.

10. 다음 <보기>의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보 기 >
- ㉠ 밀스(Mills)의 지위접근법은 사회적 명성이 있는 소수자들이 결정한 정책을 일반대중이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 ㉡ 바흐라흐(Bachrach) 등이 제시한 무의사결정론은 고전적 다원주의를 비판하며 등장한 신다원론에 해당한다.
  - ㉢ 달(R. Dahl)의 다원주의론은 정치권력에 두 얼굴(two faces of power)이 있음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부터 권력의 어두운 측면이 갖는 영향력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 받았다.
  - ㉣ 헌터(Hunter)는 지역사회연구를 통해 응집력과 동료의식이 강하고 협력적인 기업 엘리트들이 지역사회를 지배한다는 엘리트론을 주장하였다.

-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1. 다음 중 정책대안 탐색 및 집단 의사결정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명목집단기법(nominal group technique)은 관련자들이 의사 결정에 대면으로 참여하여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모든 아이디어가 제시된 후 토론을 거치지 않고 바로 투표로 의사를 결정하는 기법이다.
- ②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은 즉흥적이고 자유분방하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집단 토의과정에서 아이디어들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과 과정을 거쳐 실현가능성 있는 대안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 ③ 델파이기법(delphi method)은 전문가집단을 대상으로 대면의 토론을 반복해서 소통하고 의견의 일치를 유도하는 기법이다.
- ④ 지명반론자기법(devil's advocate method)은 반론을 제기하는 집단을 지정해 이들이 고의적으로 본래 대안의 단점과 약점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지적하게 함으로써 최종 대안의 효과성과 현실적용성을 높일 수 있다.

12. 다음 중 나카무라와 스몰우드(Nakamura & Smallwood)가 분류한 정책집행모형에 따른 정책평가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구분	평가기준	초점	주요 관심
①	고전적 기술가형	효과성	정책 결과	목표 설정
②	지시적 위임가형	능률성	투입 최소화	생산 비용
③	재량적 실험가형	반응성	소비자 만족	상황 적응
④	관료적 기업가형	형평성	이해관계자 관리	갈등 조정

13. 다음 중 호그우드와 피터스(Hogwood & Peters)가 제시한 정책변동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책승계는 기본적인 성격은 유지한 채 정책수단인 사업이나 담당조직을 바꾸는 것이다.
- ② 정책혁신은 현재의 정책이나 활동이 없고, 담당조직도 없으며, 예산이나 사업활동도 없는 “무”에서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것이다.
- ③ 정책유지는 기존 정책의 기본골격을 유지하면서 정책수단의 부분적인 변화만 이루는 것이다.
- ④ 정책종결은 정책목표가 달성되어 정책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으로 정책수단들도 모두 없어진다.

14. 다음 중 정책유형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로위(Lowi)는 정책의 유형에 따라 정책결정과정 및 이해관계자들 간 상호작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② 알몬드와 파월(Almond & Powell)의 상징정책은 국가가 국내 및 국외에 이미지나 상징을 산출하는 기능을 의미하며, 정책결정만으로 정책의 효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 ③ 배분정책의 비용부담자와 수혜자는 영합(zero-sum)게임의 참여자로 이해관계에 따른 강한 갈등 관계에 있어 정책에 대한 저항이 예상된다.
- ④ 리플리와 플랭클린(Ripley & Franklin)은 보호적 규제정책과 비교하여 경쟁적 규제정책의 집행과정에서 저항과 갈등이 적다고 보았다.

15. 콥과 로스(Cobb & Ross)의 정책의제설정모형을 설명하는 것으로 다음 <보기>의 빈칸에 들어가기에 가장 옳은 것은?

< 보 기 >

( ㉠ )은 사회문제가 정책결정자의 지시를 통해 정부의제로 채택되면, 정부의 공보활동을 통해서 공중의제로 확산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 ㉡ )은 사회문제의 당사자들이 사회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부각시키고, 여론이 형성되면 공중의제로 전환되어 정부가 이를 수용하는 의제 설정 모형이다.

( ㉢ )은 사회문제가 정책담당자들에 의해 정부의제로 바로 채택되며, 공식의제는 정책안을 제시하는 단계에서 성립된다고 본다.

	㉠	㉡	㉢
①	외부주도형	동원형	내부접근형
②	동원형	외부주도형	내부접근형
③	동원형	내부접근형	외부주도형
④	외부주도형	내부접근형	동원형

16. 다음 <보기> 중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보 기 >

㉠ 혼합주사모형 : 기본적 결정에 대하여는 합리 모형을 적용하되 모든대안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세부적 결정에 대해서는 점증모형을 적용하되 한정된 대안을 면밀하게 살피는 절충적 모형이다.

㉡ 최적모형 : 기존 정책을 토대로 하여 그보다 약간 개선된 정책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 만족모형 : 모든 대안을 탐색한 후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다.

㉣ 쓰레기통모형 : 정책문제, 해결책, 선택기회, 참여자의 네 요소가 독자적으로 흘러다니다가 어떤 계기로 교차하여 만나게 될 때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17. 잉그램과 슈나이더(Ingram & Schneider)는 사회적 형상의 방향과 정치적 권력의 정도에 따라 정책 대상자의 유형을 나누고 있다.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긍정적 사회적 형상	부정적 사회적 형상
높은 정치적 권력	(㉠)	(㉡)
낮은 정치적 권력	(㉢)	(㉣)

- ① ㉠ - 수혜집단
- ② ㉡ - 희생집단
- ③ ㉢ - 의존집단
- ④ ㉣ - 이탈집단

18. 다음 중 넛지(nudge) 방식의 정책 수단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책대상자에게 선택의 여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강제적이지 않으며, 국가의 가부장적인 개입을 억제하는 대안적 정책 수단이다.
- ② 인간의 행동메커니즘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정책에 적용하며, 정책대상자의 제한적 합리성과 인지적 편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데 관심을 가진다.
- ③ 정책의 효과가 일시적으로 나타나 혁신적 변화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있다.
- ④ 제3자가 야기하는 외부효과보다는 거래 당사자 자신이 초래하는 내부효과의 부작용을 해결하는 관점에서 정부의 개입을 정당화한다.

19. 다음 중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비용편익분석에서 어떤 기법을 적용하는가는 사업의 타당성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② 비용은 단기간에 편익(효과)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 할인율이 높아질수록 순현재가치(NPV)는 증가한다.
- ③ 비용편익분석에서 편익은 소비자잉여의 개념을 활용하며, 비용은 기회비용을 포함하나 매몰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다.
- ④ 한 사업에서 부(負)의 편익이 발생한 경우, 이 편익을 비용 또는 편익 중 어디에 반영하는가에 따라 비용편익비(B/C ratio)는 달라질 수 있다.

20. 다음 중 인과모형에 기반한 정책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책평가에서 신뢰도는 측정도구가 측정대상을 일관성 있게 측정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 ② 내적 타당도는 정책효과가 해당 정책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 ③ 구성적 타당도는 정책평가 대상을 최대한 대표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활용한 정도를 의미한다.
- ④ 통계적 결론의 타당도는 모집단이 아닌 표본으로부터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와 연관된다.

21. 다음 중 퀴와 킴벌리(Quinn & Kimberly)의 경쟁가치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직운영의 초점(내부와 외부)과 환경에 대한 조직의 태도(통제와 유연성)를 기준으로 네 가지의 문화유형을 도출하였다.
- ② 공식적인 규정과 합리적 권한 관계에 기반하여 형성된 질서를 바탕으로 안정성을 확보하는 조직은 위계지향문화의 강도가 높다는 특징을 보인다.
- ③ 과업지향문화가 강한 조직은 외부의 환경변화에 대한 신속적인 대응을 성과로 관리하며, 보다 많은 자원을 획득할 것을 장려한다.
- ④ 조직문화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으로 배타적이며 모순적인 가치요소들이 공존하는 상황을 문제현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22. 다음 중 피터스(G. Peters)가 제시한 뉴거버넌스 정부개혁모형별 문제의 진단기준과 해결 방안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탈내부규제 정부모형(저통제 정부모형)의 문제 진단 기준은 계층제에 있으며, 관리 개혁방안으로는 관리재량권 확대를 제안한다.
- ② 참여형 정부모형의 문제 진단 기준은 연속성에 있으며, 관리 개혁방안으로 가변적 인사관리를 제안한다.
- ③ 시장적 정부모형의 문제 진단 기준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독점적 공급에 있으며, 구조개혁 방안으로는 집권화를 제안한다.
- ④ 전통적 정부모형의 문제 진단 기준은 전근대적인 권위에 있으며, 구조개혁방안으로 계층제를 제안한다.

23. 다음 중 민츠버그(H. Mintzberg)의 다섯 가지 조직설계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기계적 관료제(machine bureaucracy)는 전략 부문과 핵심운영 중심의 구조이며, 업무와 조직 단위의 분화수준이 낮다.
- ② 사업부조직(divisionalized organization)은 참모 중심의 구조이며, 신속적이고 혁신적인 구조이다.
- ③ 애드호크라시(adhocracy)는 일반적으로 단순하고 안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성된다.
- ④ 전문적 관료제(professional bureaucracy)는 핵심 운영중심의 구조이며, 핵심적인 조정 매커니즘은 기술의 표준화이다.

24. 다음 중 우리나라 공무원 보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무원 보수의 상한선은 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받고, 보수의 하한선은 사회 및 윤리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 ② 공무원의 보수는 크게 수행하는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의 경중에 비례한 기본급과 자신의 경력, 근속 연한 및 능력을 반영한 수당으로 구성된다.
- ③ 고위공무원단에 속하지 않는 1~5급(상당) 공무원은 보수 중의 일부를 전년도 업무실적의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 받는다.
- ④ 공무원의 보수곡선은 J곡선의 형태를 취하며 고위직으로 갈수록 보수가 급격히 높아지는 상후하박(上厚下薄)의 특징을 보인다.

25. 다음 중 조직이론과 그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구조적 상황론 - 조직구조를 상황요인으로 강조하면서 이러한 상황에 적합한 조직의 기술과 전략 등을 처방한다.
- ② 전략적 선택이론 - 동일한 환경에 처한 조직도 환경에 대한 관리자의 지각 차이로 상이한 선택을 할 수 있다.
- ③ 거래비용이론 - 탐색·거래·감시비용 등을 포함하는 거래비용의 절감을 위해 외부화 뿐만 아니라 내부화 전략도 가능하다.
- ④ 자원의존이론 - 조직을 주도적·능동적으로 환경에 대처하며 그 환경을 조직에 유리하도록 관리하려는 존재로 본다.

26. 다음 중 동기요인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브룸(Vroom)의 기대이론에서 기대감은 특정 결과가 특정한 노력으로 인해 나타날 가능성에 대한 개인의 신념으로 통상 주관적 확률로 표시된다.
- ② 아담스(Adams)의 공정성 이론에 따르면 과소보상은 분배의 과정에서, 과다보상은 분배의 결과에서 인식된다.
- ③ 엘더퍼(Alderfer)는 ERG이론에서 매슬로우(Maslow)의 욕구 5단계를 줄여서 생존욕구, 대인관계 욕구, 성장욕구의 세 단계를 제시하였다.
- ④ 허츠버그(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 이론에서 위생요인(불만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대인관계, 감독, 임금 등이 있다.

27. 다음 중 갈등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업무의 상호의존성에 따른 갈등예방을 위해서는 부서 간 접촉의 필요성을 늘려주는 전략이 필요하다.
- ② 갈등해소 방법으로는 문제해결, 상위 목표의 제시, 구조적 요인의 개편, 자원증대 등이 있다.
- ③ 적절한 갈등을 조성하는 방법으로는 의사전달 통로의 변경, 정보전달억제, 리더십 스타일 변경 등을 들 수 있다.
- ④ 조직의 분업구조 관련 갈등예방을 위해서는 직급 교육과 인사교류가 효과적이다.

28. 다음 중 인사행정의 제도적 기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표관료제는 공직 취임에서의 형식적 기회균등을, 실적제는 실질적 기회균등의 실현을 지향하고 있다.
- ② 엽관제는 공직의 특권 집단화를 해소하는 행정개혁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 ③ 미국의 역사적 경험은 실적제의 도입에 따라 중앙인사기관의 권한과 기능이 강화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 ④ 직업공무원제도의 폐쇄형 임용체계는 공무원의 잠재능력 개발 및 장기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29. 다음 중 근무성적평정 오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규칙적 오류(systematic error)는 근무성적 평정시 어떤 평정자가 다른 평정자보다 언제나 좋은 점수 또는 나쁜 점수를 주는 경향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은 강제배분법이다.
- ② 연쇄효과(halo effect)란 평정자가 가장 중요시하는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한 평가 결과가 성격이 다른 평정요소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은 강제선택법이다.
- ③ 근접효과(recency effect)는 피평정자의 근무성적평정 기간에 가장 근접한 기간의 업무수행 실적일수록 평정에 더 크게 반영되는 경향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은 중요사건기록법이다.
- ④ 집중화 경향(central tendency)은 평정결과가 공개되는 경우에 평정대상자와 불편한 관계에 놓이는 것을 피하는 경우에 흔히 발견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은 상대평가를 반영하는 강제배분법이다.

30. 다음 중 공직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직무의 종류는 다르나 곤란도와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직렬’ 이라고 한다.
- ② 동일한 직급 내에 담당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군으로 세분한 것을 ‘직류’라고 한다.
- ③ 비슷한 성격의 직렬들을 모은 직위 분류의 대단위는 ‘직군’ 이라고 한다.
- ④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지만 곤란도와 책임도가 서로 다른 직무의 군을 ‘직급’ 이라 한다.

31. 다음 중 예산제도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목표관리 예산제도(MBO)는 부처별 기본목표에 따라 하향식 방식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
- ② 품목별 예산제도(LIBS)의 정책결정방식은 분권적·참여적이다.
- ③ 성과주의 예산제도(PBS)는 사업성과가 좋은지 나쁜지의 결과에 초점을 두며 예산을 들여 사업과 활동별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알기 어렵다.
- ④ 성과주의 예산제도(PBS)와 목표관리 예산제도(MBO)는 통제보다 관리에 초점을 더 맞춘다.

32. 다음 중 예산원칙과 그 예외 간의 연결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통일성의 원칙 - 수입대체경비, 기금
- ② 완전성의 원칙 - 수입대체경비, 차관전대
- ③ 한정성의 원칙 - 추가경정예산, 전용
- ④ 사전의결의 원칙 - 준예산, 계속비

33. 다음 중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기금을 모두 포함하므로 지방의 총재정 규모를 파악하는데 용이하다.
- ② 동일한 재정자립도는 동일한 재정력을 의미하므로, 재정자립도는 자치단체 간 상대적인 재정 규모를 비교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 ③ 지방재정에서 사용료, 수수료, 경영수익사업 등을 통한 세외수입의 확충은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한다.
- ④ 지방의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서는 국고보조금을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지방교부세를 증액하는 것이 필요하다.

34. 다음 중 예산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합리주의적 접근법은 예산 결정에 관한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택한다는 규범적인 성격을 지닌다.
- ② 공공선택론의 관점에 의하면 예산 결정의 참여자인 정치인과 관료는 개인의 효용함수에 따라 예산 규모를 극대화한다.
- ③ 실시간 예산운영 모형(Rubin)은 세입, 세출, 균형, 집행, 과정의 예산의 단계별로 다양한 합리성 기준이 적용되는 상황에 주목한다.
- ④ 단절균형모형은 사전적 분석을 목적으로 하며, 예산 결정의 과거 경로를 기반으로 예산의 단절 균형 발생을 예측한다.

35. 다음 중 우리나라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성립 시기를 기준으로 구분하며, 예산의 내용 변경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루어진다.
- ② 예산안이 회계연도 개시일 전까지 국회를 통과 하지 못하더라도, 수 개월 단위로 임시 예산을 편성해 잠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 ③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의 조세특례는 형식은 조세이지만 내용은 재정지원이라는 점에서 예산지출로서 인정될 수 있다.
- ④ 통합재정은 용자지출과 사회보장성기금을 포함 하나, 회계 간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제외한다.

36. 다음 중 사무(기능) 배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공공선택론적 관점에 따르면 정부의 기능 배분은 개인의 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한 역사적 진화의 산물이며 경로의존적이라 볼 수 있다.
- ② 엘리트주의적 관점은 중앙정부가 사회적 생산 기능을, 지방정부가 사회적 소비 기능을 분담 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전제한다.
- ③ 지방정부는 다른 지방정부의 생산적 자본 또는 노동을 유인하기 위한 효과를 기대하며 재분배 정책에 대한 높은 선호를 보인다.
- ④ 지방정부 간 사무배분에 있어 규모의 경제를 고려한 최적규모를 찾는 노력은 지방정부의 정당성과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이다.

37. 다음 중 공직부패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직이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방치한 일탈 행위가 개인적 현상에서 집단적 현상으로 발전 하면 제도적 부패가 될 수 있다.
- ② 회색부패는 사회구성원 중 일부는 처벌을 원하지만 다른 일부는 용인하는 부패를 의미한다.
- ③ 부패가 발생하는 위치를 중심으로 공무원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부패는 개인적 부패, 공무원과 국민 간에 발생하는 부패는 조직적 부패가 된다.
- ④ 권력형 부패는 정치인이나 고위공무원이 권력을 남용해 자신이나 특정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38. 다음 중 정책참여자 간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국가조합주의(corporatism)는 이익집단의 자율적 결성과 능동적 참여를 보장한다.
  - ② 이슈네트워크(issue network)에서는 참여자 간의 상호의존성이 낮고 불안정하며, 상호자 간의 불평등 관계가 존재하기도 한다.
  - ③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는 관료, 의회의 상임위원회, 이익집단이 상호이해관계를 공유하면서 정책영역별로 결정과 집행에 영향을 미친다.
  - ④ 하위정부(sub government)모형에서는 철의 삼각 모형의 경험적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참여자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39. 다음 <보기> 중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보 기 >

  - ㉠ 리더 개인의 타고난 자질에 초점을 두었던 전통적 리더십이론과는 달리 현대적 리더십 이론은 리더 개인의 학습된 자질을 리더십의 구성요소로 고려하고 있다.
  - ㉡ 리더십에 대한 행태적 접근은 리더의 행동과 효과성 사이의 관계를 맥락적으로 이해하고 개별사례 중심의 설명을 시도한다.
  - ㉢ 조건적 보상을 강조하는 거래적 리더십은 리더와 부하직원이 맺은 심리적 계약 관계를 통해 부하직원이 직무기술서에서 명시된 행동 이상의 직무성과를 창출한다고 보았다.
  - ㉣ 리더와 부하 간 교환(leader-member exchange) 이론은 조직이 아닌 개인 차원에서 리더와 부하직원 간 관계가 외집단에서 내집단으로 변화되는 것에 주목한다.

- |        |           |
|--------|-----------|
| ① ㉠, ㉢ | ② ㉡, ㉢    |
| ③ ㉠, ㉣ | ④ ㉠, ㉡, ㉣ |

40. 다음 <보기>의 행정통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보 기 >

  - ㉠ 사법부에 의한 행정통제는 행정이 이루어진 이후의 소극적 사후조치라는 한계가 있다.
  - ㉡ 옴부즈만제도는 기존의 행정결정을 무효·취소시킬 수 없다.
  - ㉢ 입법부에 의한 통제는 행정명령·처분·규칙의 위법여부를 심사하는 외부통제이다.
  - ㉣ 감사원의 통제는 회계검사, 직무감찰, 성과감사 등이 있으며, 내부통제이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